

# 열린충남

THE CHUNGNAM REVIEW 통권 61호 2013. 겨울



- 04 • 권두언  
기후변화는 현실이다 | 이민부
- 06 • 특집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변화적응대책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 채여라  
재해위험도 저감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주류화 | 정태성  
농·어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 이인희
- 23 • 충남논단  
청양 구기자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이관률
- 30 • 충남 마을 기행  
후손을 위한 사랑의 실천, 보령 은행마을 | 정봉희
- 35 • 열린마당  
옥천이 던지는 화두 - 지역·농업·농촌 | 황민호  
우리 시대, “행복한 삶”의 조건 | 정봉희
- 52 • 해외리포트  
일본 농업 6차산업화 현장을 가다 | 이영옥  
쿠바의 도시농업과 내발적 발전 | 조봉운
- 68 • 오피니언  
학습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 | 김광식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춘 관광 개발해야 | 권오덕  
양극화, 그리고 거버넌스 | 김대길
- 75 • 충남 소식
- 78 • 연구원 소식
- 83 • 충남 문화유산  
공주 상세동 산신도

# 기후변화는 현실이다

이민부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전.대한지리학회장



기후변화는 현실이고 진행 중이다. 지구표면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남북극의 해양 및 대륙 빙하와 산악 빙하가 녹아내리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측정되는 지구의 표면에서의 여러 지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Dow and Downing, 2008). 대기와 해양, 토양과 지형, 식생과 농업 등 자연현상 모두가 지구온난화로 촉발되는 기후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만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현상들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인 예측이 쉽지 않고, 이에 따른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등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최근 등장하여 그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빅 데이터(Big Data)’ 활용 방안은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의 기후변화와 그 영향 분석에 이미 적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 해결방안 강구에 요긴하게 이용될 것이다.

2011년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일어난 서울 우면산의 산사태, 지난 여름 한강과 낙동강 등 대하천에서 발생한 녹조현상, 남해안의 적조현상, 지난 10월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해안 지대에 해일을 불러온 허리케인 ‘샌디’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기후변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탄소배출 외의 또 다른 과도한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에 비협조적이었던 미국에서 ‘샌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미국 정부의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차후 미국의 기후변화 연구와 정책 구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변화의 영향은 해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저지대가 물에 잠긴다. 해수입자가 열팽창하면서 해수면 상승을 부채질한다. 또한 이미 해안지형학자 브룬(Bruun, 1962)에 의해 알려진 ‘브룬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높아진 해수면으로 더욱 강해지는 파도와 해일 현상은 해수면 상승에 의해 상실된 육지면적을 추가로 줄어뜨리게 만든다. 우리나라 동해안 모래사장들의 감소세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갯벌이 많은 서해안의 모래해안들도 그 감소가 뚜렷하다. 부산의 관광 명소인 해운대와 광안리 백사장의 모래들도 세계의 많은 해안에서 보듯이 양빈(養濱)에 의해 유지된다. 연구보고(존 휴턴, 2007)에 의하면 국토





의 대부분이 낮은 삼각주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방글라데시는 해수면 상승이 1m에 이르면 국토의 면적이 20%가 상실될 것이다.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는 물에 잠기는 도시의 해안을 더는 감당을 못하게 되면서, ‘모세 프로젝트’라 하여 해안에 거대한 수문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열대와 아열대의 해안에서 자생하는 삼림체계인 맹그로브 숲이 농업과 양식업, 관광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훼손되어 왔다. 높아진 해수면에 의해 강성해진 해일을 막기 위해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동남아에서 작게나마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베니스의 수문작업과 맹그로브 숲의 복원은 전 지구적으로 보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물에 지나치게 잠기는 해안과는 달리 대륙의 내부는 바깥 타들어간다. 관개나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은 빗물까지 이용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있다.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과학자들이 기후변화현상에 대해 정밀한 자료 분석을 하고 장단기적인 지표변화 예측과 예방책을 제시하지만, 문제시되는 기후변화 증후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그 해결의 어려움은, 논의를 단순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개인과 지역, 산업과 국가의 경제활동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 주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합의하여 경제규모를 줄이고, 산업활동을 줄이겠다는 완벽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어느 것도 용이하지 않다. 물론 개인들의 절제 방안이 강구되고, 국제적으로 수많은 국제정치적 협의를 하지만 아직 어떠한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형식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거나, 오히려 기후변화에 의해 변하는 지표면 현상에 편승하여 산업에 적응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기껏 대체 삼림을 조성하거나 조금은 적극적으로 보이는 탄소배출권의 매매 정도에 그친다. 더욱 적극적인 산업적 적응은 기후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운 업계에서는 북극해가 녹으면 동북아시아와 유럽간의 단축된 항해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북극해의 인접 국가들은 해저 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진다. 농업에서는 기온이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고, 고위도와 고지대로 이동하는 작물들의 북한계에 따라 작물 재배를 조절한다. 산업계의 경제적인 적응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국가와 국제사회는 결국 탄소배출의 저감정책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전지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도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현재의 문명 구조는 결국 에너지 자원의 고갈을 가져올 것이고, 역설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반대로 기후변화의 근원을 해소하는 노력의 결과는 자원의 절약으로 이어져 첨단인 현대 문명은 그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한국이 유치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이 국가경제에서의 이득을 넘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진정한 치유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G2(미국과 중국)가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만큼은 경쟁적으로 합의해주길 바란다. 한국의 세계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도가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결코 낮지 않다. 중후장대 산업에 치중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은 이제 기후변화 연구와 실생활과 산업에서의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채여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적응정책실 연구위원

## 1. 서론

2007년 영국에서 발간된 스텐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경고하며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에 따른 비용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며 이를 방지할 경우 전 세계 일인당 평균 소비수준이 5~20% 감소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Stern, 2007).

국내에서는 1970년 이래 이상적인 기후변화인 태풍, 호우, 폭풍 등으로 자연재해, 특히 빈번한 대형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이변에 따른 연평균 재산피해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1~2008년(2조 2,900.1억원)은 1991~2000년(6,953.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피해 증가하였다(이지훈, 2010).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부문별 기후변화의 영향, 피해비용 및 완화와 적응정책에 관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은 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부문 및 지표를 선정하여 일부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가별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2100년에 미국<sup>1)</sup> 약 3.6%, 호주<sup>2)</sup> 8%, 동남아시아<sup>3)</sup> 6.7% 등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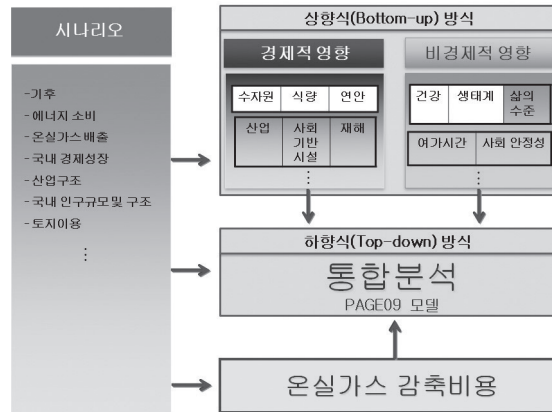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적응/완화 대책의 비용편익 등 여러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관한 경제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간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비용과 적응대책의 비용편익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정책에 대한 통합적 비용편익 분석은 국가 차원의 최적의 적응-완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당면할 기후변화의 위험도를 경제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가차원의 합리적 대응대책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사회, 경제 시나리오 설정
- 상향식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 수자원, 산림생태계, 연안, 식량, 건강

1) 미국: NRDC, 2008  
2) 호주: Garnaut, 2008  
3) 동남아시아: ADB, 2009



-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분석
- 하향식 통합 분석: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완화/적응정책의 비용편익



〈그림 1〉 분석 방법

## 2.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 수자원 :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강 유역 수자원 총 피해비용은 2100년 약 1,076억원으로 추정
  - (강수량) 2090년까지 연평균 강수량(주요 강 유역)은 기준연도 대비 증가 전망
  - (유출량) 여름철 유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유출량의 계절적 분포 변동 예상
- 산림생태계 : 2020년 887억원, 2050년 1,653억원, 2100년 2,937억원으로 피해비용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산림 분포) 2100년 잠재 아고산 및 냉온대 혼효림 약 93% 감소할 것으로 분석
  - (산림 기능) 2100년 잠재토양탄소 저장량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산림 재해)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도시는 산림재해 취약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식량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이윤의 연간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2100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약 6,134억원 예상, 2100년 농업부문 총이윤의 약 7%에 해당할 것임
  - 적응대책 미적용 시 : 2100년까지 온도 및 CO<sub>2</sub>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국내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1971~2000년도 대비 2071~2100년도에 약 15% 감소 전망).
  - 적응대책 적용 시 : 재배시기 변화 적응대책 적용 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며(1971~2000년도 대비 2071~2100년도에 약 15% 증가 전망), 2100년 농업부문 총이윤이 약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응효과는 약 11% 증가로 산출되었다.

- **건강** : 2100년까지 여름철 고온으로 발생한 초과사망자로 인해 약 14,377억원의 피해비용 발생이 전망(적응정책 시행 시 2100년 피해비용은 약 3,201억원 감소 효과).
  -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전국 초과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100년 전국 초과사망자 약 8,715명 발생 전망(적응정책 시행 시 약 6,775명이 발생할 전망으로 약 1,940명 감소 전망)
- **연안** : 2100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침식으로 인한 연안부문 피해비용은 약 1조 2,234억원, 범람으로 인해 약 6조 3,053억원 예상
  - (침식) 온도 1℃ 및 해수면 7.3cm 상승 시 평균침식률 9.6%, 온도 4℃ 및 해수면 34.8cm 상승 시 평균침식률 40.5%로 산출
  - (범람) 2100년 침수면적 약 240km<sup>2</sup>, 침수인구가 약 15만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

### 3. 기후변화 정책의 경제학적 효과 분석

#### ■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분석

대표적 하향식 모델인 CGE 모델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별 국내외 감축목표이행에 따른 영향을 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학적 비용과 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분석하였다. 2011~2020년 동안 온실가스 30% 감축시 비용은 No action 대비 GDP의 0.28~1.17% 차지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 국제배출권거래제 허용 시 실질 GDP, 실질 소비 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탄소세, 배출권 거래에 대한 수익을 기존의 조세경감에 활용하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실질 GDP 손실을 해소하면서 실질 소비, 실질 투자, 고용에 대한 효과 기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및 적응/완화 정책의 경제적 분석

하향식 기후변화 정책 의사결정 모델인 PAGE09(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 모델을 사용해 상향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피해비용 및 적응/완화 정책의 경제학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 및 함수는 다음과 같다.

-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 : A1B 시나리오 및 본 연구에서 개발된 주요 전망자료
- 온실가스 감축 곡선 : CGE 모델에 의해 개발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 기후변화 피해 함수 : 본 연구의 상향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거시적으로 재개발함
- 적응정책 비용·효과 함수 : 해외 연구자료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지 않는 BAU 시나리오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2℃ 안정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BAU 시나리오 하에서는 2100년 4℃ 이상의 기온이 상승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 1.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표 1〉 피해·손실평가 플랫폼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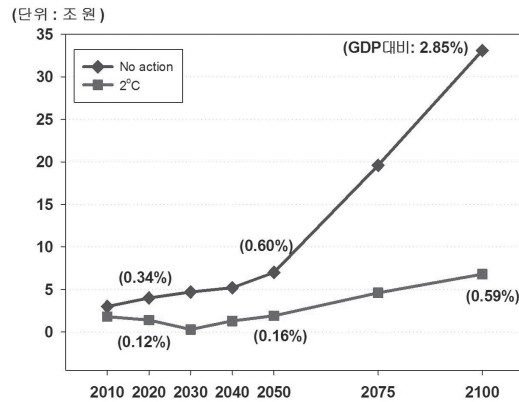
부문			2020년	2050년	2100년
시 나 리 오		GDP	1,079조원*	2,663조원	3,599조원
		인구	4,932만명	4,234만명	4,053만명
		에너지사용량	4억 9,428만TOE*	6억 6,466만TOE	5억 3,227만TOE
		온실가스배출량	6억 3,443만CO2톤	6억 7,559만CO2톤	5억 1,788만CO2톤
		평균온도	12.67℃(약 1℃상승)	13.84℃(약 2℃상승)	15.71℃(약 4℃상승)
		강수량(증가율)	1,256.91mm(약 4%)	1,399.87mm(약 16%)	1,465.00mm(약 21%)
수 자 원	물리적 영향	강수량**	• 한강 4% 증가, 낙동강 11% 증가 • 금강 7% 증가, 영산강 15% 증가	• 한강 7% 증가, 낙동강 6% 증가 • 금강 5% 증가, 영산강 10% 증가	• 한강 12% 증가, 낙동강 13% 증가 • 금강 10% 증가, 영산강 1.5배 증가
		유출량**	• 한강 5% 증가, 낙동강 10% 증가 • 금강 3% 감소, 영산강 3% 감소	• 한강 5% 증가, 낙동강 2% 감소 • 금강 13% 감소, 영산강 11% 감소	• 한강 14% 증가, 낙동강 11% 증가 • 금강 4% 감소, 영산강 18% 증가
	경제적 영향		554억원	3,574억원	1,076억원
산 림 생 태 계	물리적 영향	산림 분포**	• 잠재 아고산 및 냉온대 혼효림 : 약 24% 감소 • 잠재 온난대 혼효림 및 아열대 상록수림: 약 21배 증가	• 잠재 아고산 및 냉온대 혼효림 : 약 44% 감소 • 잠재 온난대 혼효림 및 아열대 상록수림: 약 28배 증가	• 잠재 아고산 및 냉온대 혼효림: 약 93% 감소 • 잠재 온난대 혼효림 및 아열대 상록수림: 약 339배 증가
		산림 기능**	• 잠재토양탄소 저장량 : 7% 감소	• 잠재토양탄소 저장량 : 7% 감소	• 잠재토양탄소 저장량 : 19% 감소
	경제적 영향		1,161억원	2,037억원	3,301억원
식 량	물리적 영향	잠재생산량**	쌀 : -7%, 보리 : 13%	쌀 : -12%, 보리 : 22%	쌀 : -15%, 보리 : 20%
	경제적 영향		824억원	2,964억원	6,135억원
건 강	물리적 영향	이상고온(여름철)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수	264명	3,181명	8,715명
	경제적 영향		1,039억원	7,148억원	1조 4,377억원
연 안	물리적 영향	해수면 상승	7.3cm	17.6cm	34.8cm
		범람	• 침수면적: 약 32km <sup>2</sup> • 침수인구: 약 2만명	• 침수면적: 약 65km <sup>2</sup> • 침수인구: 약 4만명	• 침수면적: 약 240km <sup>2</sup> • 침수인구: 약 15만명
		침식	평균침식률 약 10%	평균침식률 약 23%	평균침식률 약 41%
	경제적 영향	범람	2조 5,314억원	3조 9,828억원	6조 3,053억원
		침식	7,302억원	1조 3,186억원	1조 2,234억원
		합계	3조 2,617억원	5조 3,014억원	7조 5,287억원

\* 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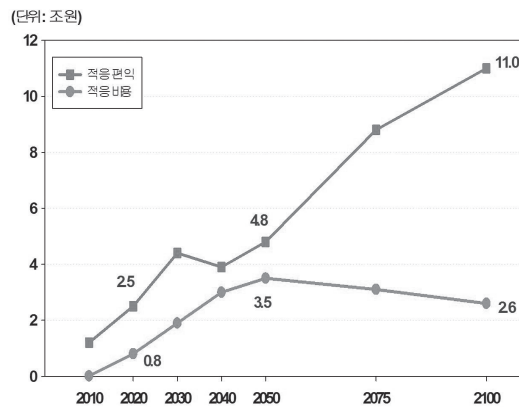
\*\* 기준연도(1971~2000년) 대비 %

## 특집\_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변화적응대책

피해는 205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100년 경제학적 피해는 GDP의 약 3%, 누적피해비용은 2,80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2℃ 안정화 시나리오의 2100년까지 누적 피해비용은 580조원 정도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감축 편익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먼 미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적응정책의 편익은 비용을 초과하며 실행시기가 빠를수록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적응정책은 2100년 기후변화의 누적 피해비용을 약 800조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연간 기후변화 피해 비용(2008년 기준 및 % GDP)



(2008년 기준, 할인율 적용)

〈그림 3〉 적응정책의 비용 및 편익



# 재해위험도 저감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주류화

정태성 | 국립방재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

## 기후변화 전망

IPCC(2012) 기후(氣候, climate)전망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21세기 후반에는 폭염(暴炎, heat wave) 강도 및 빈도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며, 집중호우 또한 그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즉, 20년 빈도의 폭염은 2~5년으로, 집중호우는 5~15년으로 각각 짧아져 현재보다 극한(極限, extreme)기상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리라 예측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은 전 세계 기온보다 높은 3.3℃ 정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경년(經年, long-term) 변동 폭이 커서 극한 현상이 빈발하는 등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홍수 및 가뭄과 관련한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 말 기온은 30년(1971~2000) 평균 대비 4℃ 상승, 강수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극한 고온현상의 빈도 증가, 강수량 증가, 호우 빈도 증가가 예측된다.

## 재해영향 분석

IPCC(2012)는 극단적 기후현상에 따른 재해영향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자연재해는 자연력의 외적 강도, 지형 및 지질 특성, 대상지역의 개발정도, 재해 취약지역 유무, 그리고 인간, 사회 및 경제적인 요인의 지역특성, 지역방재역량, 주민의식 등에 의해 규모 및 특성이 결정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특성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많은 요인들과 관련 자료들의 검토·분석이 필요하다. 풍수해의 경우, 기후변화, 토지이용변화 그리고 사회구조·시스템 등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재해 추이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후위험에 따른 재해영향 분석은 <그림 1>과 같이 재해 취약성(vulnerability)과 노출도(exposure)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i) 다운스케일링(down scaling) 기법을 통한 도시 혹은 분수계 차원에서 기후변수 판단, ii) 수문·수리학적 모델링, iii) GIS 매핑을 통한 취약성/노출도 분석과 같은 순차적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해 영향 분석에 있어 어려운 점은 현 상태에서

## 특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변화적응대책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응 및 저감대책 및 예방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확실한 상황이란 기후변화, 빈번한 태풍, 홍수규모 증대, 하천주변 토지이용의 고도화,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침수지역의 증대, 정치적·사회적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발생된다.

〈표 1〉 21세기 예상되는 극단적 기후 현상과 영향(IP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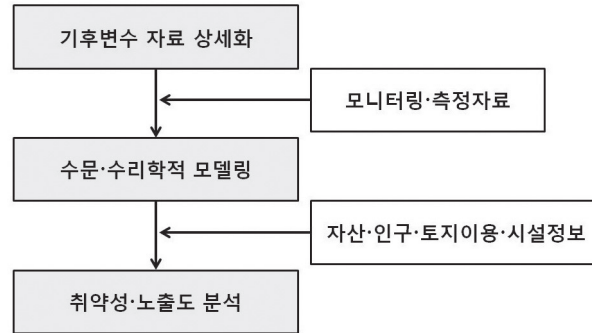
기후현상	예상되는 재해	비고
거의 모든 육지 지역에서 더 높은 최고온도, 더 많은 더운 날, 열파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층과 도시 빈민의 사망과 질병 발생률 증가</li> <li>가축과 야생동물에 대한 열 스트레스 증가</li> <li>관광 여행지 특성 변화</li> <li>많은 곡물에 대한 손실 위험 증가</li> <li>전기 냉각수요 증가, 에너지 공급 신뢰도 감소</li> </ul>	아주 높은 가능성
거의 모든 육지지역에서 최저온도 증가, 추운날서리, 한파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위와 관련된 인간의 질병률과 사망률 감소</li> <li>약간의 곡물에 대해서 손상 위험 감소, 나머지에 대한 위험 증가</li> <li>일부 해충과 전염 곤충의 범위 및 활동성 증가</li> <li>에너지 수요 감소</li> </ul>	아주 높은 가능성
강수 강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수, 산사태, 진흙사태 위험 증가</li> <li>토양 침식 증가</li> <li>홍수 유수의 증가로 일부 홍수 투수층의 재침수 증가</li> <li>정부 및 개인 홍수 보험 시스템과 재난 구조의 압력 증가</li> </ul>	여러 지역에서 아주 높은 가능성
대부분의 중위도 대륙 내부에서 여름 건조 증가와 관련된 가뭄 위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곡물 생산 감소</li> <li>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기반의 위험 증가</li> <li>수자원의 양과 질 저하</li> <li>산불 위험 증가</li> </ul>	보통 가능성
많은 다른 지역에서 엘니뇨와 관련된 가뭄과 홍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 생활에 대한 위험과 전염병, 그 밖의 위험 증가</li> <li>해안 건물과 기반 시설물에 대한 해안 침식 위험 증가</li> <li>산호초와 같은 해안 생태계의 손상 증가</li> </ul>	일부 지역에서 보통 가능성
아시아 여름 몬순 강수 변동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수 및 가뭄 발생</li> <li>가뭄이나 홍수가 우세한 지역에서 농업 생산성 하락</li> <li>가뭄 지역에서 수력발전 가능성 감소</li> <li>온대 및 열대 아시아에서 홍수와 가뭄의 정도 및 위험 증가</li> </ul>	보통 가능성

## 재해위험도 저감

재해위험도저감(disaster risk reduction)은 한정된 재해관리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존의 재해관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재해관리는 재해를 관리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써 재해의 취약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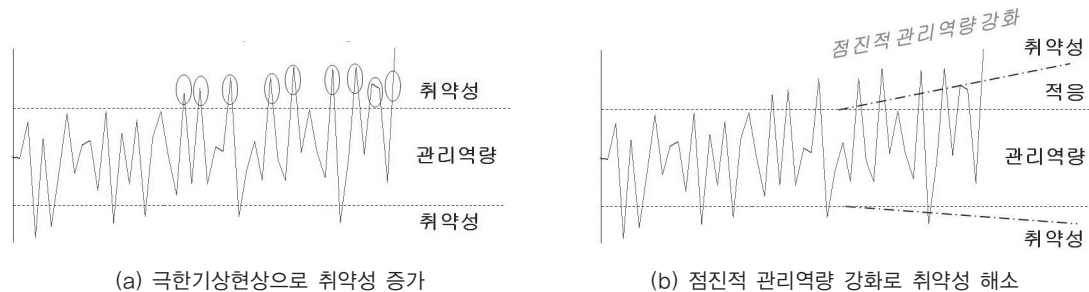


## 2. 재해위험도 저감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주류화



〈그림 1〉 기후위험에 따른 취약성평가 흐름도

노출도를 제거하는 예방(prevention), 준비(preparedness)와 위험을 저감(mitigation)하거나 혹은 피해(damage)와 손실(loss)을 최소화하는 응급대응(emergency response) 그리고 복구(recovering)이다. 재해위험도관리는 〈그림 2〉(a)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의 취약성이 커져 재원을 포함한 국가의 재해관리역량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다.



〈그림 2〉 재해위험도관리 개념도

재해위험도관리는 재해위험도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때, 재해위험도(risk)는 취약성과 재난관리역량의 함수이다. 재해위험도관리에 있어 취약성을 일시에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재원이 동시에 투입되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림 2(b)와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대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등 관리역량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취약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재해위험도를 이전하기 위하여 i) 중앙정부 중심의 재해관리를 지방정부 혹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해관리로 변환, ii) 정부중심의 재해관리를 민간분야와 공동대응하는 방안으로 전환, iii) 풍수해보험과 같은 재해보험 활성화 등의 재해위험도 이전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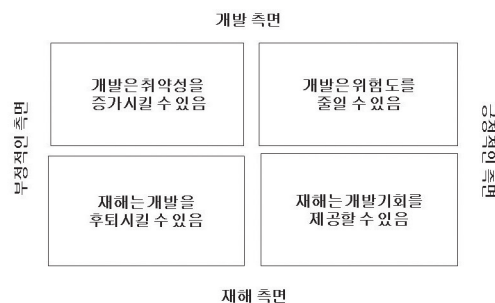
## 복원력(Resiliency) 강화

2011년 일본 북동부 연안의 지진해일이나 태국의 홍수는 자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러한 재해는 규모가 커 복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복구지연으로 인한 2, 3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복원력이 중요한 이유는 재해이후 복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해 피해가 주변지역 혹은 국가 전체로 확대되거나 재해가 같은 지역에서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복구는 경제규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태지역의 개발국들은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복구가 지연되거나 전혀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피해복구가 가능할 정도로 지역경제 혹은 국가경제를 규모화 한다는 것으로 이는 UN의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중 하나인 기근해소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즉 홍수, 태풍, 가뭄 등의 재해는 곡물피해를 유발하고 이렇게 발생한 손실로 지역, 국가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재해복구가 지연됨으로써 재해 규모가 더욱 확대, 반복되는 등 기근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복원력 강화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역·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지역·국가경제 규모를 피해예측 규모보다 크게 유지함으로써 적시에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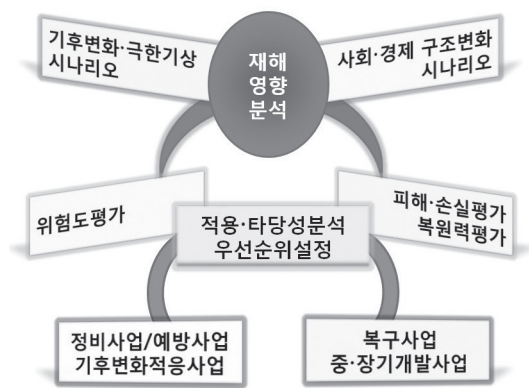
재해는 개발을 후퇴시킬 수도 있으나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개발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그림 3),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적은 재해 예방·복구사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국가 경제개발과 연결함으로써 지역·국가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재해위험도를 저감함으로써 재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국가 재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위험도분석과 이에 기반한 개발계획수립, 계획에 대한 컨센서스 마련 및 우선순위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재해 예방·복구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후변화·극한기후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위험도평가 및 피해·손실평가가 가능한 플랫폼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해·손실평가를 위해서 국토해양부(2004)는 실제 조사된 자산 자료를 토대로 침수심, 침수편입률 (그림 3) 개발과 재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비교



## 2. 재해위험도 저감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주류화

을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통계연보 등 확보가 용이하고 검증이 완료된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제피해액과 가까운 홍수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은 자연재해 피해손실추정을 위해 HAZUS-MH를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는 HAZUS-MH를 자국에 맞게 개발하여 자국의 재해 피해손실을 평가하고 적정 응급대응, 계획수립, 위험경감 그리고 예방사업을 준비하는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방재연구원(2012)은 한국에 적합한 피해손실평가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그림 4〉 피해·손실평가 플랫폼 개념도

하고 개발·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피해손실평가 플랫폼은 위험도 및 손실평가 뿐만 아니라 i) 사업 타당성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ii) 기후변화적응방안 및 지속가능한 중장기 국가개발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예방사업 및 복구사업 수립을 위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그림 4). 더불어 플랫폼은 재해 위험관련 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가용한 기본 자료와 추정 방법에 기반하여 피해·손실을 추정함으로써 위험의 경각심을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도구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 농 · 어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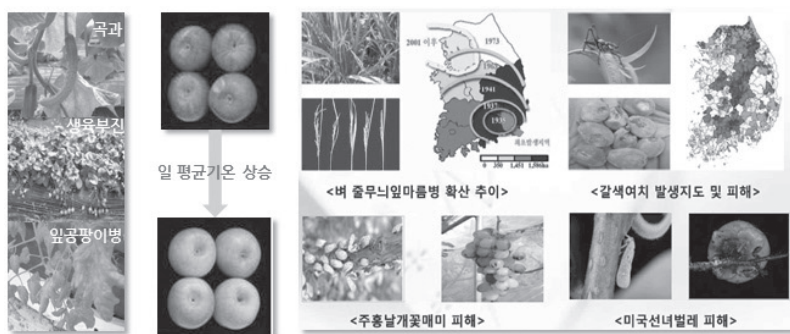
이인희 |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장

## 1.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는 생태계, 산업 · 경제 및 생활양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후변화의 진행은 다른 어떤 산업부문보다 기후 의존적인 농업에 영향을 크게 미쳐 농 ·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기후변화란 지구의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라 할 수 있다<sup>1)</sup>.

### 1)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 측면은 작물재배기간의 증가, 시설 난방비 절감, 벼 이모작 재배, 보리 재배 시 동해피해 감소와 수량 증가, 열대작물 도입 가능성 제고 등이며, 부정적 측면은 재배적지 변화, 적응성, 병충해, 기상재해, 생산성 및 품질 저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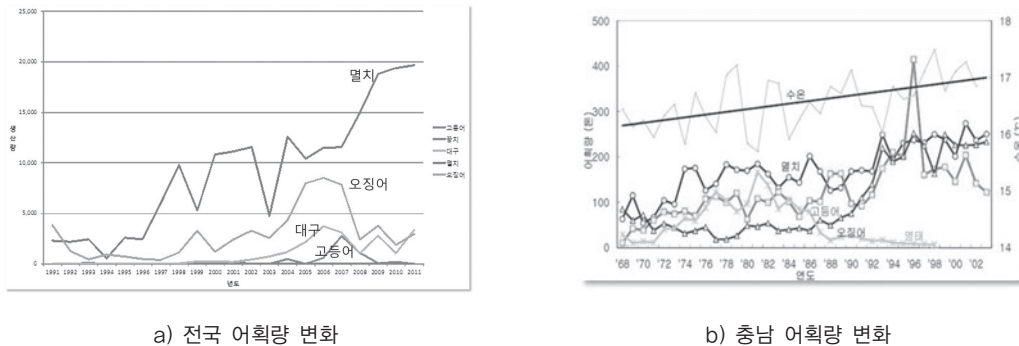
〈그림 1〉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사례

1) UNFCCC는 기후변화를 '인간활동에 직접/간접으로 기인하여 지구대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 기후 가변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라고 정의하며, IPCC는 '장기간에 걸친 기간(일반적으로 10년 이상)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으로 정의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로, 『기상법』에서는 '인간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대기가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 3. 농·어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어업부문의 기후변화영향은 난대성 어종의 어획량 감소와 한 대성 어종의 어획량 급감으로 나타난다. 충남의 경우 역시, 멸치와 고등어 등 난대성 어종의 어획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외, 해파리 증가, 갯녹음(백화) 발생, 썩에 의한 바지락어장 황폐화 등이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한 피해 사례이다.



〈그림 2〉 어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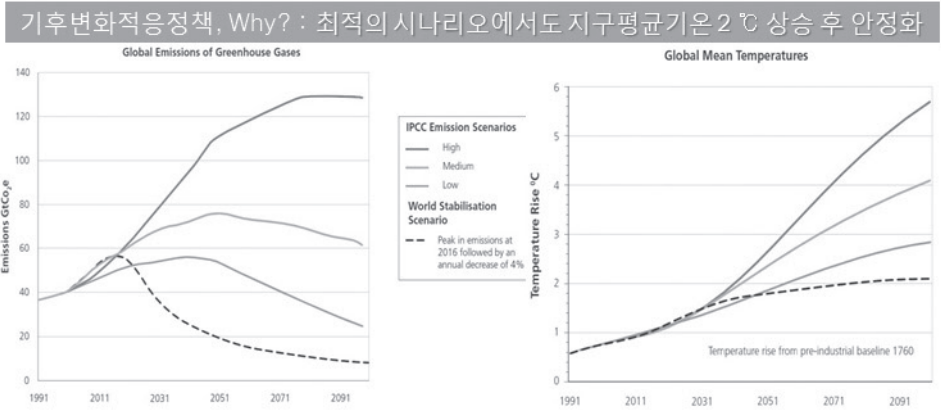
## 2)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책은 완화/감축 정책(mitigation)과 적응정책으로 구분된다. 완화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제거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적응 정책(adaptation)은 기후자극과 그 효과에 대응한 자연·인간 시스템의 조절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자연·인위적인 시스템을 조절하여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이니셔티브와 대책이다<sup>2)</sup>(IPCC, 2001).

기후변화 적응은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에도 지구 평균기온은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필수성이 제기되었다(그림3의 점선). 즉,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의 예측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Stern 보고서는 예방적 적응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명시적으로 발생한 후의 비상적 적응이나 재건/복구보다 효과적이며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고 적시하였다.

적응의 형태는 풍수해 농업보험,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침수·산사태위험지역의 이주정책과 같은 예방적 적응과 농작물재배 변경, 보험료 변경과 같은 반응적 적응으로 구분된다(표1 참조).

2)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정의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인체건강, 복지에 주는 나쁜 영향을 감소시키고, 기후환경이 제공하는 좋은 점을 취하기 위한 프로세스'(Burton, 1992), '기후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사회의 취약성을 줄이는 행동, 경제구조의 적응'(Smith et al., 1996a) 등이 있다. (채여라 2010에서 재인용)



〈그림 3〉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

〈표 1〉 기후변화 적응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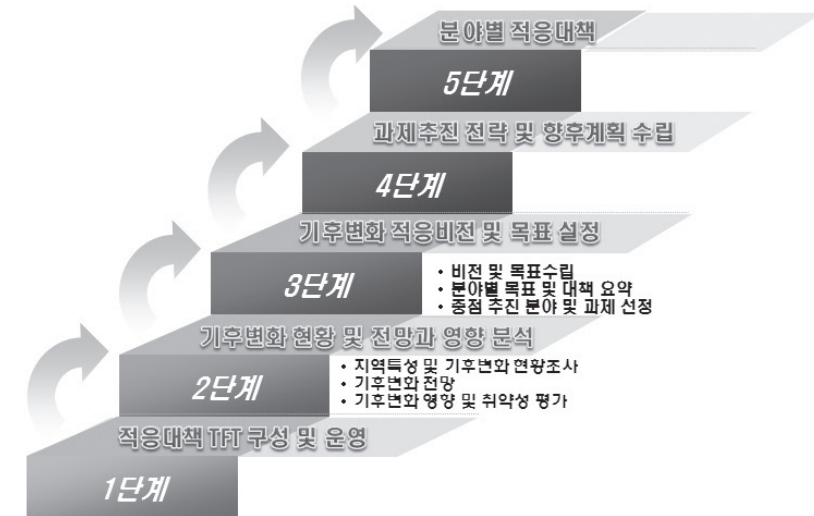
		예방적	반응적
자연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계절 길이의 변화</li><li>생태계 구성 변화</li><li>습지대 이동</li></ul>
인류 시스템	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험가입</li><li>주택건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농작물 재배 변경</li><li>보험료 변경</li><li>공기조절장치 구입</li></ul>
	공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조기경보시스템</li><li>새로운 건축법규, 설계, 기준</li><li>이주(relocation) 인센티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상금, 보조금</li><li>건축법규 강화</li><li>해변 조성</li></ul>

(자료 출처: 채여라, 2010)

## 2. 기후변화 적응 정책

### 1)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 개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은 지역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초로 하며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를 통하여 취약 부문, 취약지역을 추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추출된 취약부문/지역의 취약성의 심각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추진 분야 및 과제선정을 하고 분야별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림 4〉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의 개요

## 2) 농·어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정책

농어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목표는 농수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R&D 추진이 동반한다.

### ① 국가 적응정책

농업부문 기후변화적응정책의 기본방향은 기후변화 적응 품종·기술 개발과 재해방지 기반 구축이다. 부문별 대책은 내재해, 내병해충 품종개발, 안정적 곡물 공급체계 구축, 가축 안정생산 기술개발, 가축질병 확산 방지, 농업용수의 확보 및 안정적 공급, 수리시설 개보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온·CO<sub>2</sub>농도·강수량 증가가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평가, 재해·고온·병해충에 강한 품·종자 개발<sup>3)</sup>, 고추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작물을 중심으로 시설재배 전환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요곡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조기 구축<sup>4)</sup>, 농어업 재해보험의 가입 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를 통해 안정적 영농영어 지원<sup>5)</sup>, 새로운 열대아열대 소득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업의 경우, 고온 스트레스가 육질, 증체량, 산유량 등에 미치는 영향·원인 분석<sup>6)</sup>, 스트레스

3) 벼(내재해·내병충성), 무·배추(내고온성), 사과(고온착색), 배(저온둔감형) 등 맞춤형 신품종 개발

4) 쌀 이외에 밀·콩·옥수수 등 비축 대상의 확대, 해외농업개발 지원강화, 선물시장 활용

5) 품목은 2012년 62개에서 2017년까지 93개로 확대하며, 가입률을 2017년까지 농작물은 50%, 가축은 60%, 양식수산물은 50%까지 올릴 계획임

6) 고온시 젖소의 경우 건물섭취량 6~30% 감소, 폐사율 1.7% 증가, 돼지의 경우 사료 섭취량 15~30% 감소, 산란계의 경우 32도 이상 유지시 산란율이 13%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음.

## 특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저감 사료 첨가제 개발 및 축사 시설 현대화 지원<sup>7)</sup>, 아열대 신종 질병 진단법 개발 및 국내 유입 방지 시스템 구축, 가축질병 모니터링 대상의 확대(현재 20종에서 '20년까지 25종)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표 2〉 농어업부문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부문	추진과제	
농업	• 농작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예측모델 개발	• 아열대 소득 작물 개발
	• 내재해, 내고온, 내병해충 품종개발	• 저수지 뚫 높이기
	• 시설원에 지원 확대	• 수리안전담을 제고
	•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육성	• 농경지 배수설계 및 저수지 기준개선
	• 곡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수리시설 개보수
	• 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축산	• 가축별 고온스트레스 영향 분석	• 고온기 번식률 향상 기술 개발
	• 스트레스 저감 사료, 첨가제 개발	• 가축질병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수산	• 수산생태계 취약성 평가	• 신종 수산질병위해도 평가기술 개선
	• 신규 양식품종 개발	• 해파리 피해방지기술 개발 및 예측모델 개발
	• 외해·심해양식 활성화	

어업부문의 기후변화적응정책의 기본방향은 해수온도 변화와 신종 수산질병 발생에 대비한 어장환경 보호이다. 부문별 대책은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수산생태계(양식포함) 취약성 평가 추진, 신규 양식품종 및 외해·심해 양식 기술 개발·보급, 신종 수산질병 및 해파리 등 어장환경파괴에 대응방안 마련 등이다.

구체적 사업으로 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 등 주요 어종의 분포해역과 회유경로 변동을 예측하고, 산란·성육장 조사 및 DB를 구축하고, 수산업종 및 양식 품종별 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및 환경 조건별 최적 서식(양식)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률 및 내병성이 2배 향상된 넙치·전복, 생존률이 50% 향상된 돌돔·멍게, 내고온성 김·미역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해양식 시설지원(참다랑어) 및 심해양식 가두리 설계기술 개발하고, 신종 수산질병 및 해파리 등 어장환경 파괴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sup>8)</sup>.

### ② 충남의 적응정책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적응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품종·재배기술 보급과 축산환경 개선으로 병해충 증가 등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농업환경 구축이다. 주요과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보급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 및 관리기술 향상,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구축이다.

7) 환기시스템 설치시 돼지 폐사율은 7% 감소하며, 지열 냉방 도입시 여름철 온도 3℃ 하락함.

8) 외해양식어장을 '10년 5개소에서 '20년 50개로 확대하고, 해파리 퇴치 및 이동예측 모델 개발('15)과 함께 콜라겐 추출 등 산업적 이용 기술을 개발함.

### 3. 농·어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구체적 사업은 충남에 적합한 신품종 선발 및 보급 확대, 과수 우수품종 선발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sup>9)</sup>, 신기술 보급 및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sup>10)</sup>, 시설원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sup>11)</sup>,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조사료 자급률 제고<sup>12)</sup>,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수리시설 관리 및 노후 또는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농업기반 시설 보수·보강<sup>13)</sup>, 병해충 방제 및 관리방안 구축<sup>14)</sup> 등이다.

충남 어업부문 적응정책의 목표는 훼손된 연안 생태환경 복원 및 해양환경 개선, 어장환경 복원 및 어종별 어획량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 수산생물 감염병 및 유해생물 대량 발생 대책 수립이다. 주요 과제로는 연안 친환경 복원·보전 및 해양환경 개선, 연근해 어황 및 주요 수산자원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수산생물 의약품 적용 확충 및 방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수산생물 감염성 질병 대책 수립, 수산 유해생물 모니터링 및 제거를 통한 유해생물 대량 발생 대책 마련 등이다.

〈표 3〉 농업부문 충남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대책분야	세부과제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신작물 시범사업	국가 개발 신품종 중 충남에 적합한 신품종 선발 및 보급 확대
	과수 우수품종 선발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
기후변화 적응 재배기술 개발	신기술 보급 및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중점)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중점)
조사료 재배 확대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조사료 자급률 제고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기술 개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수리시설 관리
	노후 또는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
병해충 확산 방지 시스템 구축	병해충 방제 및 관리방안 구축
	친환경 안전농산물 병해충 관리

구체적 사업은 연안의 친환경 복원·보전 및 해양환경 개선<sup>15)</sup>,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복원<sup>16)</sup>, 갯벌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한 썩 제거와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sup>17)</sup>, 수산자원 서식처 기반 관리 및 조성<sup>18)</sup>, 충남 어종별 어획량 변화 분석<sup>19)</sup>, 수산생물 의약품 적용 확충 및 방역 네트워크 활성화<sup>20)</sup>, 유해생물 동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해생물 제거<sup>21)</sup> 등이다.

9) 지역환경 적응성 품종선발과 주요 과수작물 재배방법 개선, 여름철 생산과실 과육경도의 강화

10) 과수·채소·화훼분야의 신기술보급, 원예작물·식량작물·축산·가공분야의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11) 시설원예의 난방에너지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지열 냉·난방 시스템(천공, 히트펌프, 냉·난방 라인, 총열탱크 등) 설치,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 등의 사업.

12)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양질 조사료의 생산 단계별 목표설정을 추진하고 조사료 대 배합사료 급여(5:5 → 6:4)조정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30천ha → 32천ha)

13) 수원공 개발, 노후 수리시설 정비, 흙 수로 구조물화 시행.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의 신설 및 보수·보강 및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 및 방조제 배수갑문을 확장·보강하며, 홍수량 증가에 대비한 농경지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

14) 병해충 발생시기가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발생 주요 작물 병해충의 관리 개발, 돌발 병해충 조사체계 구축, 예찰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업. 또한 농산물들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고추 주요병해 생물적 방제기술 개발, 토양 전염병 주요 병해 조기진단 기술 개발,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오이 재배기술 개발 등을 하는 사업.



## 특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변화적응대책

〈표 4〉 어업부문 충남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대책분야	세부과제
주요 수산자원 변화 대책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 복원
	갯벌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한 쏙 제거와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수산자원 서식처 기반 관리 및 조성
	충남 어종별 어획량 변화 분석
수산생물 감염성 질병대책	수산생물 의약품 적용 확충 및 방역 네트워크 활성화
유해생물 대량 발생 대책	유해생물 동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해생물 제거

###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10,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  
 대한민국정부, 2011, 국가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  
 이인희, 2010,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대책, 충남리포트  
 이인희, 2012, 기후변화시대의 농촌개발 방향, 농업농촌의 길 세미나  
 환경부, 2010,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채여라, 2010,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정책방향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충청남도, 2011, 충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 15) 1960년대 이후 연안지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규모 연안 간척·매립사업에 따라 연안해역의 자정능력 상실 등 해양환경의 악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
- 16) 유류오염사고는 해양생태계와 양식장 등 수산업 전반에 피해를 끼쳐 수산업 종사자 생계에 악영향을 미침 이에 조업·마을·채묘 어장환경을 개선을 시행.
- 17) 충남 갯벌 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지락 양식에 피해를 주는 쏙을 제거하고, 종패살포, 종패장 및 양식장 조성, 바닥환경개선 (경운·객토, 모래살포)을 시행.
- 18) 수산자원의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 연안수역에 적합한 인공어초, 바다 숲을 조성.
- 19) 아열대 수산생물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어 수산자원 생물의 장단기 변화 예측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장기적인 어업 생산관리가 필요함 이에 어종별 어획량 변화분석, 어업구조 재편 계획 수립, 어업자원관리 체계 구축 등을 시행.
- 20) 수온상승에 따라 질병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 수산생물용 의약품 사용 어업인 지도, 국가·충청남도 방역 네트워크 활성화, 양식생물 난치성 질병 예방백신 적용 확충, 수산생물 감염성 질병 피해 저감 방안 추진.
- 21) 해파리·적조 발생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 및 예찰, 패류독소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 보령시 등 5개 시·군 해파리 제거 보조금 교부, 유해생물 제거기술 개발, 주기적인 해수 밀도, 비중, 수온 측정 및 영양염류 검사 등을 시행.

# 청양 구기자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sup>1)</sup>

이관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1. 서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농업중심의 단선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은 낙후지역의 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WTA와 DDA로 인해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마저도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성근외, 2007).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진외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안모델로써 지역의 농업자원에 초점을 두고 이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클러스터, 노르웨이 농식품 클러스터, 일본 야마나시 와인산업 특구 등을 꼽을 수 있다(김정호외, 2004).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제33조)을 제정하고 농업자원육성과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

역농업클러스터사업, 지리적표시제, 신활력사업, 행정안전부의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재정경제부의 지역혁신특성화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과 지역향토산업 등을 꼽을 수 있다(이관률, 2008).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요한 농촌지역발전의 정책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초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농촌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책은 기초생활권발전정책이다. 기초생활권발전계획에서는 포괄보조사업군을 7대 분야, 24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농업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있는 것으로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군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농업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농업클러스터로 소개될 수 있는 곳은 순창의 장류클러스터, 성주의 참외클러스터, 영동의 포도클러스터 정도를 꼽을 수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농촌지역 사업이 클러스터로

1) 본 글은 “청양 구기자 산업의 가치사슬과 발전방안(이관률외(2010), 충남발전연구원)”의 일부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화된 농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선진외국의 농촌지역은 대부분 농업 및 농촌자원을 지역경제발전의 토대로 활용하고 있다(Clackmas County, 2010).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농업클러스터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영국 요크셔-험버 클러스터(이병오외, 2009), 스웨덴 외레순 식품클러스터(김태연외, 2009), 네델란드 라흐닝언 식품클러스터(이철우외, 2009), 이탈리아의 와인클러스터(Morrison, A. & R. Rabellotti, 2009), 캐나다 나이아가라 아이스와인클러스터(신동호외, 2008b),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클러스터(신동호, 2008a)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외국은 농업부문과 식품산업의 연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충남지역의 대표적 농업자원 중의 하나인 청양 구기자를 사례로 하여 가치사슬적 관점에서 구기자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청양 구기자 산업의 문제점

청양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구기자 생산지역이다. 그리고 구기자 산업을 활성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청양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 구기자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하고, 향후 발전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양은 구

기자 산업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을 모두 양호하게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기자를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지 못함으로써 발전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청양 구기자 산업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재배

첫째, 청양 구기자를 생산하는 절대 다수의 농가는 300평 이하의 소규모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작목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친환경 구기자 및 지리적 표시제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구기자의 생산성에 치중함으로써 기능성 구기자의 재배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구기자는 대부분 병해충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은 품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면 구기자 가공상품에 적합한 품종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구기자 생산비용의 증대로 인해 영세농가에서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다. 부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할 때, 1가구에서 300평 이상의 경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노동집약적 재배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구기자의 재배면적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2) 가공

첫째, 가공업체가 영세할 뿐 아니라 가공산업 규모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구기자 관련 가공업체는 총 1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공업체에서 가공하는 구기자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가공업체는 재배농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통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공업체가 연중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구기자를 재배하고 있고, 전문화된 유통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가공업체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공상품을 생산하고 있고, 가공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공업체는 평균 4개 이상의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개별 가공상품에 대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넷째, 가공산업과 관련된 후방산업이 지역내에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다. 가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와 포장재료 등의 후방산업이 지역내에서 발전해야 하는데, 현재 이들 후방산업은 주로 수도권과 경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유통 · 마케팅

첫째, 구기자의 주요 유통경로는 지역외의 한약재시장이 지배적이다. 지역내 수집상을 통해 수매된 구기자는 서울과 경북 등의 한약재시장으로 전량 유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결과 지역내에서 구기자를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실

정이다.

둘째, 구기자의 수매과정에서 선별이 되지 않아 친환경 혹은 고급 구기자의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유통단체를 통해 구기자가 수매될 경우 구기자의 선별과정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친환경 및 지리적 표시제 갖춘 구기자를 안정적으로 수매하는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친환경 구기자는 대부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고, 이를 수매할 수 있는 유통단체가 없는 실정이다.

넷째, 청양 구기자 및 구기자 가공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상품들은 기존 단골고객을 중심으로 전화주문 판매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 4) 지원정책

첫째, 청양 구기자 산업과 관련한 민간자생조직은 불과 4개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자생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도 불과 118명 정도이다. 또한 이들 자생조직간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청양 구기자의 연구개발은 주로 병해충과 생산량을 증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기존의 구기자 관련정책은 생산기반 확충에 주요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실제 청양지역에서 구기자 생산기반은 더 이상 정책지원이 필요없는 분야로 평가된다. 한편 청양구기자시험장을 중심으로 기존

의 가공상품을 개선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발된 가공상품에 대한 시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계성이 지적된다.

셋째, 청양 구기자와 관련하여 축제와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청양 구기자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청양군에서는 고추·구기자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지만, 구기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구기자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단계에 걸쳐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청양구기자 관련기관이 집적화되어 청양구기자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적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넷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핵심주체로 평가받고 있는 청양구기자조합에 대한 정책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지금까지 청양구기자조합에 대한 지원은 주로 가공상품에 대한 정책지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청양구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공산업에서 탈피하여 본연의 기능인 수매·유통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양구기자 산업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3.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방안

청양 구기자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양 구기자 산업 자체가 그 규모에 비해서 참여하는 주체가 매우 영세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별 주체가 생산-가공-유통의 모두 책임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현재 청양 구기자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공유하고, 이들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1) 재배

첫째, 청양 구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소득으로 구기자를 재배하는 농가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구기자 작목반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기자 작목반에서는 일반 구기자가 아닌 친환경 구기자를 재배함과 동시에 지리적 표시제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양 구기자의 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양 구기자 가공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 품종을 재배하고, 이를 가공업체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수확량을 증대하는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지만, 청양구기자시험장에서 개발하는 기능성 품종을 보급 받아 재배하여 가공 산업의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제약조건 중의 하나가 수확철에 높게 형성되는 인건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기자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수확기기의 개



발·보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재배 부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바로 수확장비의 개발·보급이라고 하겠다.

넷째, 청양 구기자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곳을 2-3곳 선정하여 구기자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기자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기자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상징성을 갖춘 대규모 구기자재배단지의 조성이 요구된다.

## 2) 가공

첫째, 구기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기자 가공기술의 보급과 관련분야 창업지원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된다.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어 구기자 가공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지역내에서 구기자 가공업체를 창업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가공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표 및 특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기자 가공산업에 필요로 하는 1차 가공재료를 공급하는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구기자 가공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유통·판매망을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자체적인 유통·판매망을 확보해야 하겠지만, 청양 구기자 산업의 전체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청양 구기자와 관련 가공상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현재 개발·시판되고 있는 구기자 가공상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가공상품의 개발가능분야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구기자 가공상품은 1-2 종류를 제외하고는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많은 종류의 가공상품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시장성이 있는 1-2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구기자 가공산업의 성장에 따른 지역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기자 가공산업의 후방산업 중 포장재와 제조기기 산업의 육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내외의 관련업체를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구기자 가공업체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기자 가공산업 지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유통·마케팅

첫째, 기존 한약재시장의 유통 구조에서 탈피하여 가공산업 및 웰빙식품으로 시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구기자 및 가공산업으로 유통되는 구기자를 별도로 취급하는 유통망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개별 농가에서 직거래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양 구기자조합을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구기자의 유통·마케팅 단계에서 구기자의 선별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기자의 색상과 당도 등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선별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대부분의 구기자의 경우 건조 상태로 유통되는 바, 생구기자, 건조구기자 등으로 구분하여 선별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양 구기자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지역내에 추가 설립함과 동시에 청양구기자의 통합된 인터넷 쇼핑몰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향토상품전시관과 같은 구기자판매장을 추가 설립·운영함과 동시에 청양구기자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양구기자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명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통·마케팅 분야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공동브랜드 지원과 특허청의 단체포장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양 구기자라는 단체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되 개별 가공 및 재배농가가 공동으로 브랜드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지원정책

첫째, 청양 구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자생조직이 결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럼활동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내 혁신주체를 양성하고 이들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청양 구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공산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

서 품종개발이 병해충과 수확량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기 보다는 청양군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가공품을 만들기 적합한 기능성 품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성이 있는 새로운 가공상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양 구기자의 홍보와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양 구기자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민간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구기자 체험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표준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내용적 다양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양 구기자와 관련된 상징로고와 상징공간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청양구기자조합의 유통기능을 확대하는 전략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청양구기자조합은 유통보다는 가공분야에 초점을 두어 성장해 왔다. 친환경 구기자와 구기자 가공상품의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청양구기자조합이 중심이 되어 구기자를 수매·분류해야 하고, 유통망과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결론

본 글에서는 목적은 충남지역의 대표적 특화자원인 청양 구기자를 사례로 하여 구기자 산업의 가치사슬과 발전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청양 구기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양 구기자와 같이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양 구기자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양 구기자 산업 자체가 그 규모에 비해 참여하는 주체가 매우 영세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주체가 생산-가공-유통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현재 청양 구기자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공유하고, 이들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방안을 간략히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배부문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청양 구기자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소득으로 구기자를 재배하는 농가를 육성해야 하고, ② 청양 구기자 가공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 품종을 재배하고, 이를 가공업체에 제공해야 하며, ③ 구기자의 제품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수확기기의 개발·보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④ 청양 구기자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곳을 2-3곳 선정하여 구기자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기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공부문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구기자 가공기술의 보급과 관련분야 창업지원시스템의 도입해야 하고, ② 구기자 가공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유통·판매망을 전문화해야 하며, ③ 현재 개발·시

판되고 있는 구기자 가공상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가공상품의 개발가능분야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④ 구기자 가공산업의 후방산업 중 포장재료와 제조기기 산업의 육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유통·마케팅부문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한약재시장의 유통 구조에서 탈피하여 가공산업 및 웰빙식품으로 시장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구기자의 유통·마케팅 단계에서 구기자의 선별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 청양 구기자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지역내에 추가 설립함과 동시에 청양구기자의 통합된 인터넷 쇼핑몰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④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공동브랜드 지원과 특허청의 단체포장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끝으로 청양 구기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정책 부문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차원의 다양한 자생조직이 결성되고 운영되어야 하고, ② 가공품을 만들기 적합한 기능성 품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③ 청양 구기자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④ 청양구기자조합의 유통기능을 확대하는 전략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은행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 보령 은행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 ● 은행으로 하나되는 마을

봄철에 피는 노란 개나리가 곳곳과 상큼함을 의미한다면, 가을에 셋노랑게 올라오는 은행잎은 태양빛 머금은 성숙함과 원숙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은행(銀杏)은 원래 ‘은빛이 나는 살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은행씨가 살구씨와 비슷하게 은빛이 나기 때문에 은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은행나무를 다른 말로 공손수(公孫

樹)라고 부른다. 이는 은행나무 수령이 20년 이상 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으면 손주가 열매를 수확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충남 보령에는 바로 은행으로 조상의 후손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마을이 있다. 보령시 청라면에 위치한 이름 그대로 ‘은행마을’이 그곳이다.

날씨 화창한 가을 어느날, 필자가 찾아가보니





〈청라은행마을 김청한 위원장〉

정말 은행나무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올해 처음으로 은행마을 단풍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김청한 마을운영위원장(61세)을 만났다.

필자가 찾은 다음날이 바로 축제일이라서 그런지 지역 방송사의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필자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제일 뒷전으로 밀려야만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마을에서 내세울 건 이 은행밖에 없는데, 이것 이용해서 좀 더 마을을 알리고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축제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 마을이 고향인 김 위원장은 줄곧 이장을 지내오다가 지난 2010년부터 마을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당시 다른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던 녹색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등으로 지정받으면 정부지원도 받고 마을사업도 욕심껏 할 수 있겠다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마을에 있던 폐교를 리



〈교육장은 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5인용 6개, 20인용 1실 등을 갖추고 있음〉

모델링해 체험객을 맞을 교육장과 사무실, 숙박 및 식당시설 등을 꾸며 은행마을 녹색농촌체험 사업을 개시하게 됐다. 현재 마을에 있는 약100여 가구 중 60% 정도가 이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축제에는 거의 모든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나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활동, 특산물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 마을 주변에 성주산과 오서산 등을 찾는 관광객이 6~7만 명인데, 이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순수한 체험객은 연간 천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 마을의 자랑 ‘은행나무’

위에서 은행나무가 공손수라고 말했다.





〈은행마을엔 은행나무 2천그루가 심어져 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이 마을주민들은 조상 덕분에 밥걱정 안하고 살게 되었다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은행나무를 계속 심겠다고 한다.

지금 마을에 심은 은행나무는 대략 2,000그루. 이중 수확할 수 있는 은행열매는 연간 200톤 내외인데, 전국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다. 이게 약 4억원 어치나 된다고 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연매출이어서 필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서 ‘공손수’라 하는구나...싶었다.

그리고 은행마을에서는 은행을 이용한 다양한 특산품을 제조·판매하

고 있다. 특히 은행분말, 은행수제비 등이 인기가 많고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된 우렁이쌀, 고추, 마늘 등도 많이 찾는다고.

예로부터 은행은 폐가 허약해 나타나는 오래된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에도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여성들에게 특히 좋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제조법을 다양화해 은행 엑기스, 은행 식초 등을 개발해서 상품의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다른 마을과는 다른 점이 바로 체험프로그램에도 은행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진중인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끝을 찡긋하게 만드는 은행의 특이한 냄새를 제대로 맡고 싶다면 이 마을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b>목걸이만들기</b> 오서산에서 채취한 나무로 목걸이만들기 체험비 : 5,000원	<b>천연비누만들기</b> 천연재료를 소재로 비누만들기 체험비 : 5,000원	<b>피리만들기</b> 마을에서 자생하는 대나무로 피리만들기 체험비 : 5,000원	<b>인절미만들기</b> 마을에서 생산한 우렁이잡쌀로 인절미만들기 체험비 : 10,000원

			
<b>핸드프린팅</b> 석고나 진흙에 손도장을 찍어 기념품으로 남길 수 있어 가족끼리 즐길 수 있습니다 체험비 : 5,000원	<b>토피아리만들기</b> 직접만들어서 물을 주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비 : 5,000원	<b>잔디인형만들기</b> 씨앗이 어떻게 흩어 되는지 물을 주면 관리하는 과정에 자연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비 : 5,000원	<b>대나무물총만들기</b> 자연재료인 대나무로 물총을 만들어 추억을 되살리는 좋은 기회이며 공기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 체험비 : 5,000원

〈은행마을 상시 체험거리〉〈출처 : [www.은행마을.org](http://www.은행마을.org)〉

			
<b>은행모자이크만들기</b> 은행잎으로 여러가지모양의 모자이크를만들어본다 체험비 : 5,000원	<b>은행털기,줍기</b> 알레르기 때문에 꺼리지만 고무 장갑을 착용하면 걱정없다 체험비 : 5,000원	<b>은행두부,묵,진행만들기</b> 은행을 첨가하여 여러 가지 영양먹거리를 만들어본다 체험비 : 5,000원	<b>은행밥,백숙</b> 은행을 먹여키운닭으로 백숙을, 은행을 넣은영양밥체험 체험비 : 10,000원

〈은행마을 특화 체험거리〉〈출처 : [www.은행마을.org](http://www.은행마을.org)〉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어도 평생 은행만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김 위원장과 마을 주민들의 마을 사랑이 계속 되는 한 말이다.

필자가 경험했듯이 가족, 연인, 단체 등이 은행마을에 방문하면 깊어가는 가을, 레드카펫 못지않은 골드카펫을 밟으며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힐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은행털이범(?)이 될 수 있는 점은 각오하라! ^^

## 주변 관광자원과의 결합,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

은행마을은 2012년 처음 마을이름을 걸고 첫 축제를 열었다. 물론 한계도 보였다. 시골에서 처음 축제를 갖다 보니 주차장이나 행사장 준비가 미흡했다. 그러나 희망도 보았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잡은 ‘신경섭 전통가옥’(충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 1843년 건립)을 찾은 관광객과 함께 어울려 자연이 만든 무대에서 펼쳐지는 음악공연 등 마을의 특색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마을 주변에는 오서산역새, 청라저수지 가을단풍, 대천해수욕장 등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해 이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등과 연계하면 올해 처음 열린 단풍축제가긴 하지만 앞으로 국내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잡





〈제1회 청라은행마을 단풍축제 모습〉

## [보령은행마을...]

### ● 찾아가는 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전IC로 빠져나와 청양 방향으로 12km 이동 후 청라교차로에서 좌측으로 가다가 오서산길 장현리 방면으로 가면 되고, 대전 등에서는 서천-공주고속도로 청양IC로 빠져 칠갑산을 지나 청양 못가 탄정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보령 방향으로 10km 직진 후 구숫골길 화성면사무소 방향으로 빠져나가면 된다.

- ▶ 주소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545-7 (T. 070-7845-5060))
- ▶ 홈페이지 : [www.은행마을.org](http://www.은행마을.org)

# 옥천이 던지는 화두

## - 지역 · 농업 · 농촌

황민호 | 마을연구소 안남 뿌리연구원

###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태동

모일 틈이 없다. 얼굴 맞닿 시간도 없다. 없이 사는 사람들,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벌어가며 한달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서로에게 잠시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이다.

옥천군내 각 초중고등학교를 돌면서 청소하는 새로이크린 식구들, 옥천군 예비사회적 기업이다. 어제 옥천순환경제공동체 모임에 새로이크린 박흥희 과장님이 늦었다. 늦은 이유는 나이 지긋한 박영순 대표님이 입원하셨기 때문이다. 일흔이 넘는 나이에 남들 같으면 손주보는 재미에 푹 빠졌을 할머니가 같이 더불어 살자는 새로이크린 대표를 맡으면서 많은 직원들과 같이 건사하며 힘겹게 살아내고 있었다.

아이 다섯에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새로이건축 추병우 대표님은 정작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정작 단칸방 살이 하면서 자기 집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몸도 성치 않아 몇번 병원 입원을 하시더니 또 건축 현장에 나오셨다. 추운 겨울 동료들과 자재를 나르며 부수고 만들면서 현재 안남면 배바우작은도서관의 북카페 공사를 하는 중이다.

싸늘한 바람이 오가는 겨울 노점은 그 체감 온





도가 더 서늘하다. 오가는 사람이 없을 수록 사람의 온기마저 없어 마음 한켠이 더 추워지는 것이 겨울 노점이다. 거리를 전전하시다 이제야 저렴하게 공설시장 한 켠에 등지를 트신 어르신들,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해도 때부자 되는 것 아니다. 그냥 부대끼며 사는 것이다. 파장하면서 같이 모여 소주 한잔 드신다. 그래도 의지할 것은 서로 밖에 없다고 같이 한번 힘을 모으자고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신다.

후미진 곳,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락모락 빵의 기운이 넘실댄다. 정말 더디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얀 빵모자를 쓰고 몰입하며 일한다. 효율로만 따지면 당장 문을 닫고도 남지만 열키설키 서로 모자란 부분 채워가며 한뼉 한뼉 만들어가고 있다. 옥천장애인보호작업장이다. 일자리보다는 사실 보호 개념이라고 말하는 오재훈 원장은 내년도 쓰레기봉투 제작사업을 공모로 따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싱글벙글하고 있다. 그리고 옥천읍내 빵 매장을 하나 더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다. 그 화려한 푸레주르나 파리바게트와 비교해서는 세련되지도 못하지만 그냥 정직함으로 지역에서 승부할 생각이다. 동정이나 시혜를 바랄 생각은 절대 없다.

옥천살림, 옥천의 먹을거리 살림을 진사하기 위해 농민들이 2008년 직접 만든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을 모아내어 지역 내 유통을 하는 로컬푸드 전진기지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아무리 번듯하게 잘 만들어졌다 한들 이들 실행 주체가 모이지 않았다면 그림에 떡이었을 것이다.



학교급식과 어린이 급간식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역에 많이 먹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 땅도 살고, 사람도 살고, 지역도 사는 그런 선순환 농업에 필이 꽃혀 동분서주하고 계시다. 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못하다. 대표님, 운영이사님 한 달 50만원 활동비로 이래저래 바빠다니시고 노동자들도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

다. 괴물같은 유통구조에 싸우면서 지역에 하나 둘씩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아오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다 예감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올해 10월 옥천순환경제공동체를 만들었다. 서로가 간절하게 필요





한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 선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 ‘뭘 모여봤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 뺏기면서 서로 피곤한 일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일찌감치 깨졌을 모임이다. 서로 뻥한 사정 너무도 잘 아니까 그 진정성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들 바쁘다. 그렇게 바쁘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하는데 당장 몇 시간 비우면 한달 생계비가 손실이니 정말 귀한 시간들 내어주신 것이다.

이는 관에서 앞장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리 갈 것이다. 하지만 고민은 여전히 많다. 아직 조직 정비도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지도 미지수다. 단순 친목모임만으로는 끌고가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서로 얼귀매며 좋은 인연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같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먼저 서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각 작업장 마실가기를 먼저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각 작업장의 전 직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 워크숍을 가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뭘니뭘니해도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얼굴보고 손잡고 웃으면서 이물없어져야 서로가 통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 딱히 예산이 없어도 되는 일이다. 마음이 통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나. 험난하지만 서로 곁을 내주면서 흔들리는 맘 단도리 하면 무서울 것은 없는 것이다.

낙후지역으로 손꼽힌 충북하고도 옥천군, 그래서 신활력사업이라는 거대 사업을 받아놓고도, 신발전지역사업이라 지정받아놓고도 그 돈 밑빠진 독처럼 술술 빠져 보내는 옥천군과 달리 민(民)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지면서 시작하고 있었다. 관은 아직도 무지몽매하게 기업유치라는 신기루에 휘말려 온 힘 다 빼고 있지만, 민은 남아있는 우리부터 같이 돕자는 마음으로 자그맣게 시작하고 있었다.

## 백척간두, 열악한 지역의 상황

인구 5만여명, 바로 대전과 인접한 농촌인 옥천의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대전과의 20분 내외의 거리로 지역 경제는 이미 안팎으로 거대자본의 빨대로 양껏 빨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대전과 바로 인접한 국도와 고속도로변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지켜



서 있고 롯데리아, 푸레주르, 파리바게트, 최근에는 베스킨라빈스까지 국내외 굴지 대자본들이 이 먹을 것 없는 곳까지 포아리를 틀고 야금야금 빼앗아 가고 있었다. 그 뿐이라. 구멍가게는 2-3년 전부터 화장을 곱게 한 편의점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몇 십 미터 거리를 두지 않고도 각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나들목 주변에는 SK라는 대기업이 주유소와 휴게소를 만들었다. 옥천군은 지역에 대기업 민자 유치로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떠들어댔지만, 그것이 큰 빨대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거기서 쓰는 만큼 돈은 외부로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길이 뚫리는 대로 자본의 빨대가 꽃히는 대로 빨려 들어갔다. 허약한 믿음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기 일췌였고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서 카트 굴리는 재미로 다양한 물건보고 담는 재미로 한주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 곳에는 아이들 홀리는 각종 장난감과 영화관, 책방에 책들이 그득했다. 모든 것이 넘쳐났다. 지역에는 웬지 비쌀 것 같고 다양한 물건도 없고 불친절해 보였다.

농업은 어떤가? 마트에 가면 알 수 있다. 마트에는 옥천 농산물을 보기가 하늘에 별 따기였다. 농사지은 것 다 공판장으로 이마트로 홈플러스로, 쇼핑몰로 입점하기 바쁘니 헐값에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버렸다. 심지어 지역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도 지역 농산물 보기가 참 귀했다. 지역농산물 코너를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것을 가늠하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이없다고 해야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좋은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생협으로 한살림 전국망을 통해 다 올라갔지만, 내려올 줄 몰랐다. 인구도 적은 지역은 시장이 아닌 것이다. 거기 얼마나 먹는다고 돈이 되겠는가? 이렇게 먹을거리는 어느덧 상품이 되었다. 유통되고 소비되는 현실은 지난한 농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역에서도 살피지 못하는 농업은 언제나 울이 되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흥정해서 무조건 깎아내리는 상품이 되었고 농촌은 그야말로 공장이 되었다. 단일품목 대량생산, 규모화하여 생산원가를 줄이는 일, 그러면서 블로그를 만들고 쇼핑몰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발한 홍보 마케팅으로 역대 농부를 꿈꾸라고 이 나라는 이 자치단체는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먹을거리는 상품이 되어 돈 되는 품목만 살아남았다. 일상적으로 먹는 양파, 당근, 대파는 우리 농산물을 보기 힘들었다. 땅은 지역이 점 찍어놓은 나라가 규정해 놓은 작목으로 특화해 포도로 뒤덮여 갔는데 이 나라는 FTA다 뭐다 아무런 상관없이 매국협정을 맺으면서 폐원하라고 문 닫으라고 강권했다. 경쟁력없는 농부들은 일찌감치 문 닫으라고 땅



내놓으라고 강권했다. 평생 땅만 파고 온 나이드는 농부한테 돈 몇 푼 줄테니 쉬라고 권했다. 이를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모를 일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주민의 힘으로 제정되고 실행되려다 보니 지역의 농업 상황이 너무도 뻔히 보였다. 학교급식은 아이들 먹을거리 밥상으로 우리의 밥상 그대로였다. 식단 메뉴에 자주 오르지 않는 포도, 복숭아는 지역에 넘쳐 나는데 정작 자주 먹는 파와 양파, 당근 등은 구해 볼 길이 막막했다. 그렇다고 관에서 나주처럼 학교급식 생산단지를 만들지도 않았거니와 그것은 민이 원한 것도 아니었다. 농민들은 지역 자급농업에 대해 스스로 생각했고 이를 어떻게 진사할 것인지 고민한 것이다.

## 민에 기반한 투쟁과 대화 – 옥천 농정민주주의의 역사

“옥천은 농정과 지역발전에서도 여러 선진지에 비해 내세울 특이점은 없는 편이다. 튼튼한 협동조합의 뿌리를 가진 원주시나 잘 짜여진 계획을 통해 빠른 성장을 보이는 완주군, 마을의 내재적 발전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온 진안군, 교육과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한 홍성군 등 여러 선진지와 비교하면 평범한 과정을 거쳐 온 것이 옥천군 지역농업발전 모델이라고 하겠다. 특별할 것 없는 지역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과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삶의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풀어가는 평범한 방식이 이른바 ‘옥천방식’의 대표적인 작동원리라고 할 수 있다”(자치와 연대로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옥천군의 실험. 2012, 8,31 농정연구센터 발제문, 주교종, 윤성희, 황민호 공저 중 일부)

이처럼 완주군이 의지를 가진 군수와 컨설팅 기관의 연대체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진안군이 별정직 공무원의 해안으로 인한 귀농지원정책과 마을 살리기 정책의 결합으로 이뤄지고 원주가 장일순, 지학순 등 역사적 인물에 기반한 협동조합 역사의 맥락과 홍성의 흥동 농촌 농업 역시 이찬갑, 주옥로가 만든 풀무학교의 역사에 기인한다면 옥천의 역사는 별반 특징지워질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옥천은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 농민운동 조직의 씨앗인 옥천군 농민회는 1990년 다소 늦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명



맥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3개면 지회 이외에 확장성이 떨어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근 보은군과 영동군이 화려한 투쟁의 역사를 자랑한 농민회가 아예 없어진 것을 보면 옥천군 농민회는 가늘지만 길게 지속적으로 내실을 기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옥천군 농민회는 옥천 농정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옥천군 농민회는 지역 농업과 농촌을 진사하면서도 순수성만을 고집해 홀로 싸우거나 하지 않았고 같이 연대했다. 한농연, 한여농, 친환경연구회 등의 농업인 단체와 꾸준히 연대의 틀을 공고히 하며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으로 전환해 같이 목소리를 냈다.

또한 옥천의 특수성이라면 1989년 군민주로 만들어진 옥천신문이라는 공론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농민회가 농민연대의 틀을 구성해 이슈를 제안하거나 잘못된 농업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거리에 나와 투쟁을 하면 옥천신문을 통해 고스란히 공론화 됐고 확산 됐다. 이런 나름의 작동원리를 통해 주민이 목소리를 내면 신문에서 공론화됐고 자치단체와 의회와는 투쟁과 대화를 번갈아가며 논의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처럼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건강한 지역신문의 존재 유무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또 농촌에 대한 고민도 빼놓을 수 없다. 농업만 부여잡고 돈 잘 버는 농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을 고민하면서 면단위 자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 안남면과 안내면의 자치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농민회의 오랜 기틀이었던 안남면과 안내면은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면서 할머니 한글 학교인 안남어머니학교와 안내 행복한 학교를 농민들 스스로 만들었고 도서관과 복지회관 등도 주민들의 논의구조를 통해서 만들었다. 안남면은 지역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인 지역발전위원회라는 틀을 일찌감치 2006년에 만들어 물이용부담금으로 만들어진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또 환경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지역 친환경 농산



물의 유통을 고민하며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모여 옥천살림을 2008년에 만들었고 현재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생산자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찌감치 만들어진 대청호 환경농민연대도 물로 맺은 인연으로 하류지역과의 친환경농산물 교류는 물론 농촌체험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옥천군에 파견나와 근무 중인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지사 윤성희 부팀장은 옥천방식의 작동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른바 옥천방식의 지역농업활성화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듯 하다.

첫째, 자치의 정신이다. 이는 스스로 주인되어 방향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연대의 방식이다. 이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역량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지속적인 협의에 의한 합의이다. 이는 공개적인 협의를 통해 내부 역량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특정 주체를 중심으로 구심점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한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자칫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일방으로 논의가 흐를 수 있는 위험과 주도적 주체의 영향력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옥천의 지역농업 발전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특정 주체 중심이 아니라 관련 주체들이 연대의 방식으로 함께 추진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모든 주체는 지역에 대한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변화와 발전은 이러한 역할들이 맞물리고 얹혀져 방향성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주체들을 모으고 방향성을 맞춰 가는 것이 느리면서 가장 빠른 길이다. 지역의 변화는 그 자체로 역사이다.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속에서 서로간의 관계 맺음을 통해 스스로 거대한 흐름의 일부가 되어간다. 살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방향을 잡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열어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면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해 하지 않는다. 옥천은 그렇게 살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



## 뚝뚝한 군수, 의원, 공무원이 없다면 못 하는가? 우리가 한다.

옥천군은 완주군처럼 의지를 가진 군수나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진안군처럼 열정을 가진 별정직 공무원이 있지도 않다. 원주시처럼 마을을 알아주는 시의원도 없다. 홍성군 홍동면처럼 지역의 화수분인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시 묻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농업, 농촌 발전은 요원할 것인가? 뚝뚝한 군수와 의원을 뽑는 것만이 능사라면 우리나라 농업, 농촌은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고 미래를 그릴 힘도 없어 보인다.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는 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 변화가 요원하다고 생각해왔다.

법과 제도, 행정과 공무원이 문제였지만 그들만 탓하고서는 그들이 바뀌기만을 기대한다면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당당하게 요구한다. 안 되면 싸운다. 공론장을 스스로 만들어 대화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놓지 않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협의하며 하나씩 더 디지만 만들어 나간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다함께 지켜낼 것이다.

거버넌스, 협치 요즘 유행하는 화두이다. 이것이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4년마다 바뀌는 관에 의지하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관치의 한 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그것의 가치를 잃지 않고 본 뜻을 살리려 한다면 주민과 농민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 ‘협치’라는 화두가 던져주는 시대정신이 아닐까 한다.

## 추신 :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에게 묻는다

그냥 지역에 마을 연구소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 마을연구소 뿌리연구원이 되고 싶었다. 마을과 뿌리를 귀하게 여기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맨날 서울에서 잘 짜여진 프리젠테이션으로 갖은 감언이설로 공모사업 따내어 기간 동안 혈세 잘 받아먹고 귀신같이 사라지는 컨설팅 회사들 너무 자주 봐왔다. 그들이 만든 보고서는 어디 책장 한





구석에 꽃혀 그 이후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돈이 되는 공모 사업이 있으면 또 어김없이 응모해 지역을 야금야금 갉아갔다. 지역 주민을 대상화 시켰고 무슨 지역을 캔버스인 것 마냥 자기 물감으로 그림을 마구 그려놓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접어들고서 떠났다. 아무것도 축적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밀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나름 농촌과 지역을 위한다는 명목만 달았을 뿐 수탈의 구조는 비슷했다. 지역과 같이 호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같이 평평한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자산을 기록하고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생계를 건사하기 위해 옥천살림 트럭운전기사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하고 있으며 주로 군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옥천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참 가치있고 보람된 일이다. 사회적 일자리로 박봉이긴 하지만 이 땅에 최저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내할 일이다. 그리고 옥천살림에서 배려해 준 덕분에 짬나는 대로 지역 농촌을 돌면서 같이 도울 일을 이것 저것 하고 있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수화권역과 일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안내 행복한 학교 일을 도와 문집도 만들고 있다. 또 옥천살림의 한 일원으로 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 참여해 지역의 선순환경제를 만드는데 작은 밑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 셋을 키우는 건실한 가장이 되려 애쓰고 있다.

## 우리 시대, ‘행복한 삶’의 조건<sup>1)</sup>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에 묶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는 이 ‘행복’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지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한겨레경제연구소, 충청투데이와 공동으로 ‘행복한 삶 : 경제적 가치를 넘어’를 주제로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는 국제컨퍼런스를 지난 11월 30일 대전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로 잘 알려진 행복경제학의 전도사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생태와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ISEC) 대표, 부유하지 않아도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 나라 부탄의 국민총행복위원회(GNHC) 카르마 치팀 위원장, 삶의 질 연구의 권위자로 일본 내각부 소속 웰빙측정위원회 나오토 야마우치 위원장,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1) 본고는 충청투데이(12.3), 한겨레신문(12.5) 등에 보도된 기사 및 충남발전연구원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토론자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행복의 조건은 물질과 정신적 만족의 조화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스털린의 역설'이란 이론은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소득이 늘어도 행복이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대략 분수령이 되는 소득수준이 1인당 2만7,000달러 정도라 하니, 한국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대표〉



〈카르마 치팀 장관〉



〈나오토 야마우치 교수〉

야마우치 위원장은 “1980년 초에 일본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으나 그 뒤로 1인당 국민소득(GDP)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체감하는 행복은 감소하거나 정체했다”며 “조사를 해 보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건강, 가정, 소득, 정신적 휴식, 친구, 일, 자유시간의 순이어서, 경제적 측면 못지않게 비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정감은 행복과 직결되는 정신적 만족이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잘 잡혀 있고 스스로에 대해 만족할수록 안정적이며, 오히려 독립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폭넓은 유대감이 중요할 뿐 아니라 자연과도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며 살아야 한다고 토론회에 모인 행복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진하는 물질적 성장은 행복보다는 오히려 고립과 불안을 높인다. 노르베리 호지 대표가 〈오래된 미래〉에서 묘사한 40년 전 티베트 고원의 작은 마을 라다크는 처음에는 “자부심이 확고하고 강건”하며 “미소가 입 주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을이었다. 그런데 1975년 이후 서구의 세련된 도시문화에 노출되면서 자신들의 음식, 의



복, 집 그리고 언어까지 비교를 하고 열등하다 느끼며 불행해하기 시작한다.

노르베리 호지 대표는 글로벌 소비문화 아래서 모두가 이런 심리적 압박의 희생자라고 밝힌다. 세계 어디를 가나 정상 체형의 여성조차 자신의 외모에 불안감을 느껴 죽음을 무릅쓴 단식을 감행한다. 아시아의 여성들은 서양인 비슷하게 성형수술을 하는 게 유행이다. 노르베리 호지 대표는 “현실에서 소비는 더 극심한 경쟁과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은 더 고립되고 불안해하며 불행해진다. 그래서 더 미친 듯 소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한다.

공동체의 유대감 속에서 행복을 가꾸려면 우선 소득, 지위, 기회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위화감이 큰 곳에서 배려와 공감이 자라나기 어렵다. 야마우치 위원장은 일본이 1980년대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며 ‘1억 총 중류사회’가 붕괴된 게 오늘날 일본 사회의 우울함을 만들었다고 진단한다. 그는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빈곤하다 느끼는 사람이 먼저 불행해졌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소득 상위계층 역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됐다는 것”이라며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모두 불행해졌다”고 말한다.



서구화의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고 전통을 계승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도 행복의 밑거름이 된다. 부탄의 치팀 위원장은 “행복하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깊이 내려가면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수천년 간 전승된 부탄인으로서의 애정, 공정, 부모에 대한 태도 같은 게 자아의 바탕이 된다.”고 말한다.



부탄은 '대가족'을 이런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보고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치팀 위원장은 “가족, 이웃, 동료와 함께하기 위해 가장 가치있는 자원인 시간을 써야 한다”며 “하루를 3분해 적어도 8시간을 가족이나 공동체와 보내고 기부나 명상을 통해 활력을 얻도록 하는 게 부탄의 행복정책”이라 말한다.

하지만 지구화한 생산과 소비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동체에서 분리하는 강력한 원심력이다. 이런 힘에 대항하는 구심의 에너지가 필요한 데 노르베리 호지 대표는 이를 지역화에서 찾는다. 그녀는 지역화란 “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가능한 한 줄이고 기본적인 필요를 가까운 곳에서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녀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는 슈퍼마켓 소비자보다 열배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눈다.”며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안정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힌다. 그렇다고 국제무역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다만 기업들이 어느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소속돼 그 사회의 규칙을 따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물론 이런 노력이 쉬운 일은 아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충남이 추구하는 ‘내발적 발전’은 기본적으로 지역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행복이나 공동체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자고 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비판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르베리 호지 대표는 이에 대해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가 문제라는 생각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며 “성장제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성장이 사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지역화가 경제와 환경이 동시에 사는 길이란 것을 납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행복을 정책결정 잣대로 삼는 리더십 필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우리의 물질적 삶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하지만 GDP 성장률은 우리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기에는 아주 둔탁한 잣대다. 태풍이 휩쓸어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됐을 때 집을 새로 짓고 끊긴 도로를 복구하면 GDP 성장률은 올라간다. 이처럼 성장률이 높아지는 과정에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나 환경오염, 자원고갈 같은 외부효과를 GDP는 계산하지 않는다.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인구 60만명의 작은 나라 부탄은 40여년 전부터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는 독자적인 지표 개발을 추진했다. 2008년에는 이렇게 만든 지표로 국민총행복(GNH)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부탄의 GNH 지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 및 경제적 발전’, ‘문화 보존 및 진흥’, ‘환경보호’, ‘굿 거버넌스’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9개 부문 33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2년에 한번 GNH 지수를 측정하는데, 2010년 측정된 지수는 1점 만점에 0.743으로 건강, 생태학적 다양성, 공동체, 문화 등은 우수하게 나온 반면 교육과 거버넌스는 그렇지 않아 이쪽에 정책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부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국민총행복 평가를 실시해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치팀 위원장은 “외국자본이 투자를 제안해도 곧바로 승인하지 않는다.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열어 개인, 지역,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평가 한 뒤에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30대 3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외롭다’고 답하는 15살 학생의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게 나오는 등 사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2009년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웰빙을 측정해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고 2010년 말 내각에 행복 문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웰빙측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가 만든 웰빙 지표는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 관계성 등 객관적 지표를 측정하는 한편 행복감 등 주관적 웰빙도 측정을 한다. 야마우치 위원장은 “최근 선거철에 일부 현의 지사가 자기 지역을 행복 수준이 가장 높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 앞으로는 행복을 정책 결정의 잣대로 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가 행복을 정책 수행의 잣대로 삼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발연은 행복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고, 도민들을 설문 조사해 조사의 영역과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지표 안에는 교육, 환경, 문화 및 여가, 건강 및 보건, 가족 및 공동체, 일자리 및 소비, 주민 참여 외에도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같은 주관적 행복 영역도 포함된다.

박진도 원장은 이런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충남이 추진하는 ‘내발적 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발적 발전은 지역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서 세계와 관계 맺기에 나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 이후 가진 참석자 간 대담을 정리한 것으로 이들 명사로부터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는 지혜와 해법을 들어보자.



△ 박진도 충남연 원장 = “초국적 자본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를 규제할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나”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열대우림을 보호하고 우울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참여와 투자가 필요하다. 빈부격차는 사회와 환경적인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기관이 서로 함께 협력해 경제체제 변화를 꾀해야 한다. 많은 동료도 경제체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정부를 움직여 함께 협력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 박 원장 =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은 지역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추동할 주체역량이 미약하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역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도민들이 이러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실질적으로 자신들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설득력이 있다”

△ 박 원장 = “부탄은 현재 9개 영역 33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카르마 치탐 = “GNH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즉 부탄 사회의 발전속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경제지표와는 다르다. 우리가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애정, 동정, 노인공경, 효도 등과 같은 근본적 삶의 이유는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100년 후를 내다본 좋은 사회를 그려보고 싶다.”

△ 박 원장 = “충남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한다”

△ 카르마 치탐 = “충남도는 이미 전통적인 성공모델로써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화라는 개념을 지닌 가치 중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족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가족의 일원이다. 그러나 가족 간에 시간을 갖는 일이 거의 없다. 이것은 비극이다. 삶과 노동의 균형을 이뤄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마련된다. 이는 정부가 해줘야 한다. 노동과 휴식의 균형잡힌 인식이 필요하다.”

△ 나오토 아마우치 = “행복을 정책으로 연계하는 연구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지역 주민의 행복에 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연구를 통해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철 공약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와 실천말이다.”

△ 박 원장 =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행복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 나오토 아마우치 = “빈부격차의 확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예전에는 중산층이 두터웠지만, 80년대부터 와해돼 빈부격차가 커졌다. 상위 소득계층 역시 불행해 졌다. 90년대 이후로 일본 부동산 시장의 붕괴 후 10년간 경제침체를 겪은 게 이유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경제 집중적인 방식의 사고 이외에 비경제 요소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3년 전 일본 정부는 웰빙을 측정하고 국가정책에 반영기로 했다. 이러한 기조에 2010년 웰빙측정위원회가 설립됐고 행복 수준을 정책 마련의 기준으로 선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박 원장 = “충남도 행복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 고승희 = “행복을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충남 차원의 가치와 이념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어렵다. 또 이를 만들어내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다. 향후 충남도의 행복정책 실천을 위한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충남발전연구원은 2013년에도 행복지표 개발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연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일본 농어업 6차산업화 현장을 가다 !



이영옥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연구원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고령화, 과소화, 시장개방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어업의 6차산업화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농어촌 현장에서도 6차산업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이해와 활발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11년에 ‘6차산업화법’ 개정을 계기로 본격적이고 활발한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현장에서는 행정, 민간 및 전문가 등의 협력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6차산업화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열린충남 지난 호<sup>2)</sup>에 이어 일본 시즈오카현(静岡県), 도쿄(東京)지역의 농어업6차산업화 현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1. 돈도코아사바(どんどこあさば)

- 방문일자 : 2012. 7. 24
- 소재지 : 静岡県袋井市浅岡447
- 홈페이지 : <http://www.dondoko.jp>

1)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관련 내용은 유학열, 2012 '일본의 6차산업화 최근 정책 동향' 공공정책 2012년 10월호 p.23~26 참조

2) 농림수산성 6차산업화전략실, 시즈오카현청, 치바현 6차산업화센터(NPO 치바농업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은 열린충남 60호 (2012 가을호) 참조



[출장일정표(2012.7.23~26)]

월/일	방문지
7월23일 (월)	시즈오카현청(경제산업부 마케팅추진과) 관동농정국 시즈오카지역센터(시즈오카현 6차산업서포트센터)
7월24일 (화)	6차산업화 복합시설(とんどこあさば) - 농산물직매장+농가레스토랑+가공공장 6차산업화 농원(名倉マロン農園)
7월25일 (수)	NPO법인 치바(千葉)농업지원네트워크(치바현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지역주민주도형 농산물 직매장(치바현) <sup>3)</sup>
7월26일 (목)	지자체 농수산물 안테나숍(도쿄) 농림수산성(식료산업국산업연대과 6차산업화전략실)



〈그림 1〉 돈도코아사바 전경



〈그림 2〉 농가레스토랑

2001년에 자본금 1,855만 엔(약 2억5천만원)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돈도코아사바(とんどこあさば)는 농가레스토랑, 농산물직매장, 농산물가공공장이 한 곳에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3가지 시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전형적인 6차산업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의 지역농가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직매장에 출하,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상품성이 떨어진 농산물은 농가레스토랑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공공장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두부와 반찬류를 가공해 농가레스토랑 농산물직매장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농작업 체험 등 관광서비스업까



〈그림 3〉 뷔페식 농가레스토랑

3) 본고에서의 소개는 생략

## 해외리포트



〈그림 4〉요일별 제공되는 밥종류

지 진출을 꾀하고 있어 한 지역(공간)에서 생산, 판매, 가공, 소비,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6차 산업의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다.

농가레스토랑은 지역 농수산물물을 이용하여 30여 종의 음식을 만들어 뷔페식<sup>4)</sup>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철 채소, 과일 등을 제공, 다양하게 메뉴 변화를 주고 있어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농산물 가공공장에서는 지역산 콩을 이용한 두부를 생산하여 직매장, 온라인을 통한 판매 및 농가레스토랑의 식재로 납품하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두부케이크는 농가레스토랑의 디저트로 매우 인기가 높다. 특히 두부케이크는 치즈가 들어가지 않지만 치즈케이크처럼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곳 가공공장에서는 2012년부터 두부만들기 체험도 가능

하게 되어 어린이는 물론 주부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농산물직매장은 지역의 150여 농가와 계약하여 하루 평균 30~40농가로부터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받아 위탁판매하고 있다. 계약된 농가는 농장주가 직접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일반 시장, 마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 돈도코아사바는 위탁판매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18%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돈도코아사바는 시즈오카현의 농어업6차산업 선진모델로 알려지게 되어 2008년 그린투어리즘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는 업적을 남기는 등 입소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많은 고객층을 확보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한 5명의 정직원과 25명의 파트직원의 대부분을 지역 내에서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모로 어려운 농촌, 농업의 현실 속에서 지역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농어업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돈도코아사바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다.



〈그림 5〉농산물 직매장

4) 점심의 경우 성인 1인에 1,500엔(약 21,000원)이며, 저녁은 약간의 해산물을 추가 약간 더 비싸다.



〈그림 6〉 농수산물 가공품

## 2. 나구라 멜론농원(名倉マロン農園)

- 방문일자 : 2012. 7. 24
- 소재지 : 静岡県袋井市浅岡447
- 홈페이지 : <http://www.dondoko.jp>



〈그림 7〉 나구라 멜론농원(온실)



〈그림 8〉 나구라 멜론 카페

나구라 멜론농원은 농원 주인의 성인 나구라(名倉)를 본 떠 이름을 지었으며 1963년부터 3대째 가족경영 형태로 멜론만을 재배하는 멜론 전문 농원이다. 부부, 아들, 며느리 4명의 가족이 재배, 가공, 판매 등 1차, 2차, 3차 산업을 개인별 특기를 살려 역할을 분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0㎡ 정도의 유리온실 8동에서 연간 만 여개의 멜론을 생산(연간 4~5작)하고 있으며 3대째 내려오는 나구라 멜론농원만의 재배기술 노하우로 최상급 멜론을 생산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멜론은 개당 출하가가 약 6,000엔(약 9만원)정도의 고가로 고급백화점, 고급온천호텔 및 고급레스토랑 등으로 직거래 판매하고 있다.

나구라 멜론농원의 6차산업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산업에서는 고급 멜론을 생



## 해외리포트



〈그림 9〉 포장된 멜론(출처 : <http://nagura-melon.jp>)

산하고, 2차산업에서는 상품가치가 좀 떨어지는 2, 3 등급의 멜론으로 멜론CAFE세트<sup>5)</sup>, 멜론케이크를 가공하고 있으며 3차산업에서는 직거래, 멜론카페 운영으로 한 농가 내에서 농어업 6차산업을 실현하고 있다.

멜론을 이용한 2차 가공품은 13년 전부터 멜론쥬스, 멜론샤베트로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멜론케이크를 개발 예약판매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농원 주인인 나구라씨는 “멜론을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2차), 직거래(3차)를 할 경우 약 3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한다. 이렇듯 1차 농수산물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것이야 말로 농어업 6차산업화의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림 10〉 나구라 멜론농원 가공품(출처 : <http://nagura-melon.jp>)

### 3. 농산물 안테나숍

최근 일본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중심가에는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縣<sup>6)</sup>, 市町村<sup>7)</sup>들이 개설한 안테나숍이 있다. 안테나숍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 홍보는 물론 소비자의 needs 파악, 관광안내, 도농교류, 귀농귀촌 안내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도쿄 시내에만 2011년 현재 53곳이 개설,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3년 간 17곳이 신규로 개설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안테나숍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가 가장 많으며, 향토요리 판매, 관광안내

5) 멜론CAFE세트란 한입사이즈의 냉동멜론을 말하며 가정에서 손쉽게 멜론쥬스 및 멜론샤베트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임. 특히 이 멜론카페세트는 나구라멜론농장에서 개발한 특허품임

6) 현은 일본의 행정구역단위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도와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임

7) 시정촌은 일본의 행정구역단위이며 우리나라의 시, 군과 유사한 기초자치단체임



## 일본 농어업 6차산업화 현장을 가다!

내, 각종 이벤트 개최이다. 사업을 통한 운영효과로는 지역 농수산물의 지명도 향상과 판로확대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소비자의 needs파악, 지역정보 발신, 관광객의 증가, 도 농교류 촉진 등의 효과도 얻고 있다.

안테나숍의 운영주체는 제3섹터, 농협위탁, 민간(NPO<sup>8)</sup>) 등 위탁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도쿄에 있는 53곳의 실태조사 결과<sup>9)</sup>를 보면 연간 매출액 1억~3억 엔 미만이 14곳(26.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3천만 엔 미만 13곳(24.5%), 5천만~1억 엔 미만 9곳(17.0%) 순으로 나타났다. 매장 면적을 보면 100㎡ 미만이 23곳(43.4%)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200㎡도 12곳(22.6%)으로 대부분 200㎡ 미만으로 비교적 매장 면적은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산물 안테나숍은 지역이외의 사람, 문화, 정보교류는 물론 특산물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세 농가, 농기업이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홍보, 마케팅, 소비자요구 파악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 가족농가 및 농기업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생산된 가공품에 대한 판매, 홍보, 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지자체 농수산물 안테나숍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대행하고 있어 영세농가와 농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안테나숍 설립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11〉 도요타시(豊田市) 안테나숍



〈그림 12〉 오사카부(大阪府) 안테나숍



〈그림 13〉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안테나숍



〈그림 14〉 도야마현(富山縣) 안테나숍

8) NPO는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로, 경상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시행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음

9) 일본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조사한 〈2011년 자치단체 안테나숍 실태조사〉 결과 인용

### 유기농업의 대표국가, 쿠바의 도시농업



조봉운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1. 연수의 개요

쿠바는 최근 요시다 타로의 저서들로 인해 지상천국, 생태도시, 유기농업의 메카, 살아있는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적인 정책과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로 소개되고 있다. 과거 풍요로운 국가에서 몰락하여 다시 부활하고 있는 나라이면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쿠바의 유기농업은 매우 인상적으로 많은 저서나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너무 과장된 내용이며 실제로 가 보고서 실망했다는 글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쿠바의 유기농업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2012년 9월 8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쿠바를 찾았다.

## 2. 쿠바란 도시<sup>1)</sup>

1) 2012년 전국시도연합의회 해외연수자료에서 인용하였다.



〈그림 1〉 쿠바의 지도

쿠바<sup>2)</sup>는 카리브해의 카리브 제도 중 가장 큰 섬과 인근 섬들로 이루어진 아메리카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쪽으로는 미합중국의 플로리다주와 바하마, 동쪽으로는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와 아이티, 서쪽으로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남쪽으로는 케이맨 제도와 자메이카와 인접하고 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는 멕시코만에 면한 항구도시로, 카리브해 지역 최대의 도시이다. 서반구에서 손꼽히는 양항(良港)으로 유명하다. 시가는 좁은 해협 서쪽의 반도부를 차지하는 구시가와 서쪽에 새로 건설된 신시가로 구분된다. 구시가는 무역항, 어업기지로서 활기를 띠고 있을 뿐이며 소비도시를 이루었던 화려한 옛 모습은 1968년 3월에 국영화된 이후 찾아볼 수 없다. 구시가에서는 모로성과 대가람등 옛 사적과 카피트리오와 같은 근대적 건축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현대적인 고층건물과 최신설비를 갖춘 고급호텔이 해안가에 늘어나 있다.

신·구시가지 사이에 있는 ‘아바나의 숲’에는 정면 계단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바나대학이 있고, 그 남서쪽에는 혁명광장·국립도서관·정부청사 등 새로운 고층건물이 있다.

아바나 구시가지는 전성기의 스페인 콜로니얼 양식이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으며, 1982년에 구

2) 쿠바는 카리브 해의 군도로, 주변의 섬들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콜로라도스 제도, 사바나 카마구에이 제도, 하르디네스 데 라 레이나 제도, 카나레오스 제도이다. 쿠바 본섬은 면적이 105,006km<sup>2</sup>로 국토의 대부분을 이루며, 길이는 1,233km에 이르는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섬이다. 쿠바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은 남서쪽의 이슬라 데 라 후벤투드(젊음의 섬)로 그 면적은 3,056km<sup>2</sup>이다. 쿠바의 총면적은 110,860km<sup>2</sup>이다

## 해외리포트

시가지가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최근에는 관광진흥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 유럽, 캐나다 등의 관광객이 모여든다. 17~18세기에 걸쳐 지어진 아바나만의 서쪽 반도부를 차지하는 구시가지는 하얀 건물이 많은 스페인풍의 아름다운 거리 풍경으로 지금도 스페인 식민지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유물들이 남아 있다. 구시가지의 서쪽에 있는 광대한 신도시 지구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쿠바의 자본가와 바티스타정권 정부요원의 고급주택지로 개발된 지역으로, 넓은 도로와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나란히 서 있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는 혁명 광장이 있다.

쿠바에는 수천 년 전에 타이노족 등 원주민이 농경 등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15세기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쿠바에 건너온 이후, 19세기까지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다.

한편, 쿠바와 미국간의 긴밀성은 쿠바의 역사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쳐 미국은 끊임없이 쿠바를 지배하려고 넘보았다. 쿠바 내에서 산발적인 독립전쟁을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스페인은 쿠바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았고, 군사 통치자들은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1898년 미국의 메인호가 아바나항 정박 중에 폭발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미서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스페인은 쿠바를 미국에 넘겨주었다. 종전 후 3년 동안 쿠바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03년 관타나모에 미 해군 기지가 설치되고 쿠바의 중추적인 기능을 미국자본이 장악하는 등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59년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고, 1961년에는 그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임을 천명하였다. 이후,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쿠바혁명 때부터 1993년까지 쿠바의 독재정권을 피하고자 120만 명의 쿠바인이 쿠바를 탈출하였다. 1970년대 쿠바는 볼리비아, 앙골라 등의 무장봉기를 지원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해당 국가의 독재자들을 원조하였다. 1989년 소련의 붕괴로 쿠바는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3년에는 일부 민간경제에서 미국과의 교류를 허용하였으나, 미국은 금수조치로 일관하였다. 쿠바에는 양심수가 500명에 이르는 등, 쿠바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인권 침해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2008년 병이 중해진 피델 카스트로는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

### 3. 유기농업으로 대표되는 쿠바의 도시농업<sup>3)</sup>

쿠바의 도시농업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196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정책과 1989년의 소련의 붕괴로 대량의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했던 쿠바의 근대농업 시스템이 생산자재

3) 쿠바 유기농업연구소 방문시 연구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표 1〉 쿠바의 현황

구분	주요내용
위치	쿠바는 카리브 해의 군도로 쿠바본섬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섬. 면적 : 111천km <sup>2</sup> (한반도의 1/2)
행정구역	15개의 주와 1개의 특별자치체
주민 구성	물라토(백인과 흑인혼혈) 37%, 유럽계 백인 51% (주로 스페인계), 흑인 11%, 중국계 1%로 추정되며, 점차 혼혈이 증가 추세
종교	쿠바 혁명 이전에 인구의 70% 이상이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였으나, 혁명정부의 탄압으로 약 40%까지 감소하고, 로마 가톨릭과 아프리카 요루바족의 전통종교가 섞인 혼합종교인 산테리아(Santeria)도 민중종교로 존재
기후	열대에 속하지만, 연중 부는 무역풍으로 온화함. 11월부터 4월까지의 건기와 5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로 구분되며, 연중평균 기온은 섭씨 25도정도 임
시차	한국보다 14시간 늦음
교민	한국교민은 2010년 현재 약 25명이며, 또 지난 1921년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 취업한 인 중 약300명이 쿠바로 넘어갔으며, 이들 후손 약 960명이 현지에 동화돼 살고 있음.
인구	11,075,244(2012년 7월 현재), 인구성장률 -0.115%(2012)
인구구조	유년(14세이하) 17.3%, 청장년(15-64세) 71.1% 노년(65세이상) 11.7%
출산률	9.96명/1,000명당(2012), 사망률 7.52명/1,000명당(2012)
총출산률	1.45명/1여성(2012)
도시화율	75%(2010), 아바나 인구 214만명(2009)
기대수명	77.87년(2012), 남 75.61 / 여 80.27
의료지출	11.8% of GDP(2009), 의사수 6,399/1,000명(2009)
병상수	5.9병상/1,000명(2009)
교육지출	13.6% of GDP(2009), 교육연수 18년, 남 16 / 여 19(2009)
실업률(15-24세)	3.1%, 남 2.8 / 여 3.5(2008), 전체실업률 1.4%(2011)
산업성장률	3.2%(2011)
GDP(purchasing power parity)	\$114.1 billion(2010)
GDP(official exchange rate)	\$57.49 billion(2010)
GDP 성장률	1.5%(2010), 1인당 GDP \$9,900(2010)
GDP 구성	농업 4%, 공업 20.8%, 서비스 75.2%(2011)
노동력	5.153 million, 직업 농업 20%, 공업 19.4%, 서비스 60.6%(2005)
투자	10.5% of GDP(2011), 예산 수입 \$43.57billion / 지출 \$46.17billion(2011)
세금	75.8% of GDP(2011), 공공부채 35.4% of GDP(2011)
농산물	설탕, 담배, 밀감, 커피, 쌀, 감자, 콩, 가축
산업	설탕, 석유, 담배, 건설, 니켈, 철, 시멘트, 농기계, 약
수출	\$6.347 billion (2011) - 상품 : 설탕, 니켈, 담배, 생선, 의약품, 밀감, 커피 상대국 : 중국 24.9%, 캐나다 21.6%, 베네스웰라 7.2%, 네덜란드 7.1%, 스페인 6.5%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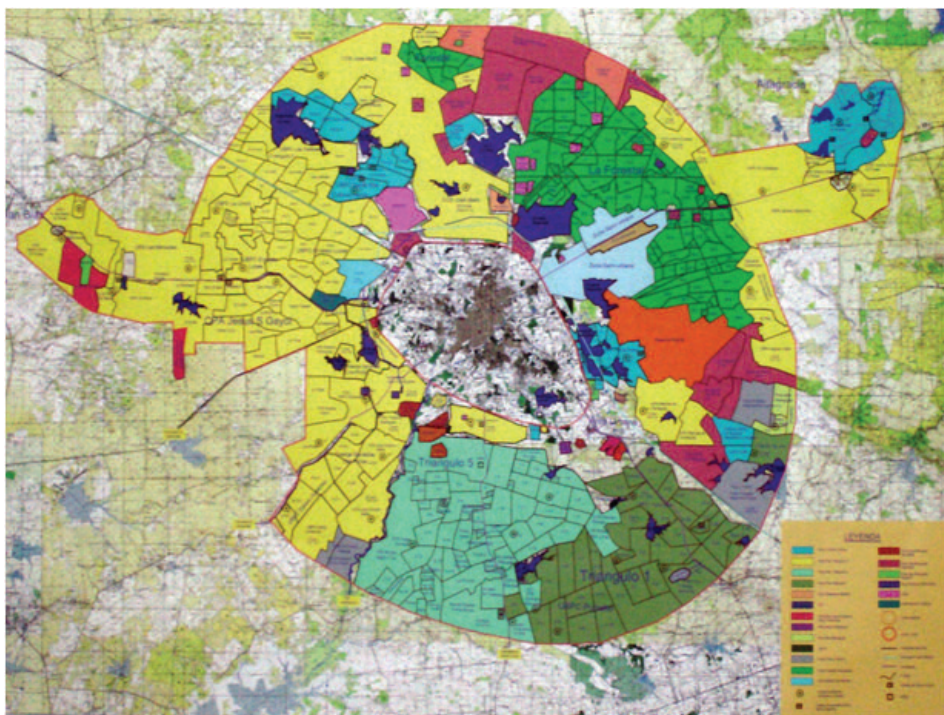
※ 자료출처 :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u.html>)



## 해외리포트

의 수입 부재로 붕괴되고, 생존을 위하여 쿠바 국민들은 텃밭을 만들어 자급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에 주목한 쿠바정부는 무상으로 유휴지와 공공부지에서 식량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유기농업연구, 농민교육, 농민장터 설립 등을 통해 쿠바 도시농업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제는 생존을 위한 도시농업을 넘어 건강과 생태환경을 위한 유기농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쿠바의 도시농업은 그 정의가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는 도시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농업의 형태를 말하지만, 쿠바에서는 우리나라로 보면, 시·군청소재지 도시지역의 10km권내, 시·군청소재지 도시지역의 5km권내, 읍면소재지 도시지역의 2km권내, 15호정도의 취락지역의 자가 채소밭 등을 포함하는 근교농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도시농업지역

도시농업은 해당지역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기농법에 의해 생산하되,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퇴비생산, 종자생산, 농업용수, 유기비료 등)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는다. 쿠바의 도시농업은 생산성이 높은 토지의 확보하는 것과 과거의 농업기술에 현대 첨단기술을 접목한 친환경농업기술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생산자가 외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를 위한 농업지식 교육, 보 증된 종자, 새로운 기술 도입, 판매네트워크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시농업의 교육과 관련하여 도시농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농장확장시스템은 최근 몇 년 동안

좀 더 보강된 모델로 발달해 왔다. 이 보강된 모델은 쿠바 내 모든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좀 더 빠르고 간단한 방법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과학적 성과와 진보된 경험, 생산자교육들이 즉각적인 생산을 용이하게 도왔다. 도시농업계획을 통해 설립되고 보강된 생산자 교육 시스템은 생산자가 계속해서 최신기술을 배우고, 훈련되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농업, 식량, 환경문화를 상당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있다. 도시 및 도시근교 농업 고등학교(ESAUSU)는 도시 및 근교농업계획의 주요요소로서 생산자 훈련과 새로운 기술 도입 및 교육, 다양한 경작 및 축산방법을 지도하고 교육한다.

〈표 2〉 AU-ASU(도시 및 도시근교농업)의 필수요소, 하위프로그램(Subprogram)

Subprogram	도시	도시 근교	Subprogram	도시	도시 근교
1. 토지사용	√	√	16. 과일	√	√
2. 유기 비료, 토양	√	√	17. 바나나	√	√
3. 씨앗(종자)	√	√	18. 열대 알뿌리 식물과 뿌리식물	√	√
4. 해충방지를 위한 농업생태학적 기술 사용 (바이오 농약)	√	√	19. 곡물	√	√
5. 수자원사용	√	√	20. 커피, 카카오	√	√
6. 가축사료	√	√	21. 쌀		√
7. 판매	√	√	22. 그물하우스유기농업	√	
8. 양봉, 수분	√	√	23. 양계	√	√
9. 소규모 농업	√	√	24. 토끼 사육	√	√
10. 직업훈련	√	√	25. 양 사육	√	√
11. 물류		√	26. 산양 사육	√	√
12. 채소와 생초(fresh hurb)	√	√	27. 돼지 사육		√
13. 고추냉이나무	√	√	28. 가축	√	√
14. 약용식물과 가루조미료	√	√	29. 수경재배		√
15. 꽃	√	√	총계: 29	25	28

하위 프로그램(Sub program)의 상호관계



## 해외리포트

이는 도시농업계획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산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자, 기술자, 전문가, 지도자, 간부들이 생산베이스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들을 교육하면서 육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州)의 노력과 협력으로 도시농업 농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전된다. 각 과정의 교육은 시(市)에서 지정한 기술 지원과 함께 국가그룹(national group)에 의해 시(市)에 전해진다. 또한, 시, 도, 국가차원에서 잡지, 비디오, 보고서와 같은 교육물들을 배포한다. 국가그룹(national group)에서 실시하는 각 캠프에서는 생산자, 기술자, 경영자 등을 포함한 참가자 12,000명 이상을 양성, 교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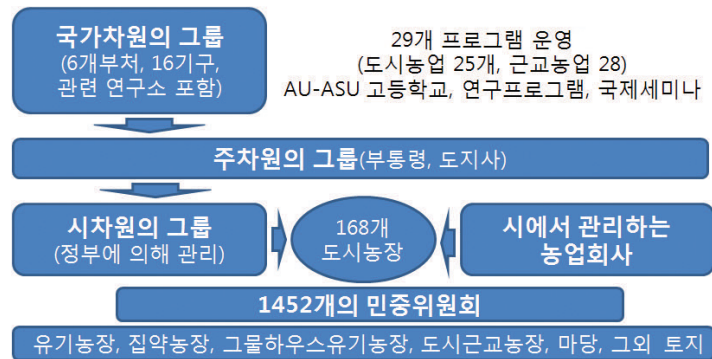


〈그림 3〉 농업기술개발

도시 및 도시 근교 농업을 담당하는 국가 그룹(national group)은 국제열대농업연구소 (INIFAT)을 통제하고 지휘한다. 또한 여러 분야의 관점에서 도시 및 근교농업계획을 다루고 있으며, 6개 부처의 각기 다른 연구소 전문가들을 계획에 참여시켰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통합의 예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시 및 근교농업계획의 발전을 위해 국가그룹(national group)과 전국 소농협회(ANAP), 쿠바과학기술포럼, 혁명방위위원회(CDR), 기초단위협동조합(UBPC), 쿠바여성연맹(FMC), 농업기술청(ACTAF), 동물보호협회(ACPA) 등 많은 협회들과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여러 카리브해 연안국 등 외국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쿠바의 도시농업의 생산 기반이 되는 기초 단위는 유기농장 1,956.8ha(4,014개), 집약농장 8,233.2ha (6,405개), 그물하우스 작물 384ha, 마당과 텃밭 12,983ha(385,611개), 구획농지





〈그림 4〉 농업관련 조직체계



〈그림 5〉 농업기술 보급

3,1124ha(145,626개), 도시농장, 자급농장 조직, 가내재배 등이 있으며, 이러한 도시농업은 퇴직자 37,562명, 여성 82,515명, 청년층 78,312명, 중간기술자 44,500명, 전문가 10,112명 등 총 38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도시농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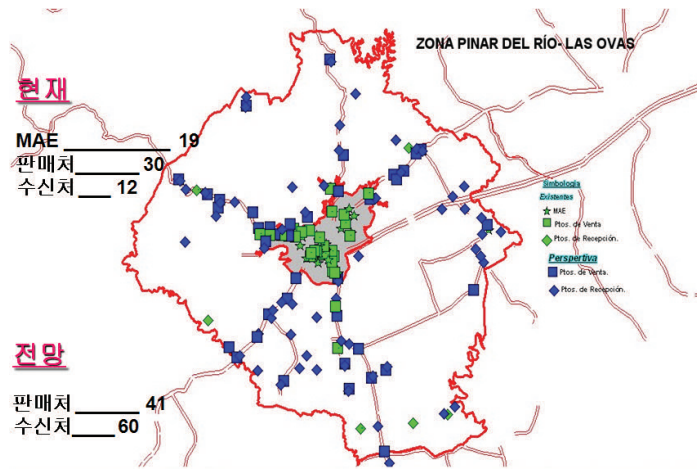
쿠바의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사용 가능한 모든 토지를 축사 혹은 농지(채소, 생초, 꽃, 약용식물, 과일열매를 재배할 수 있는 토지)로 바꾸고 유지한다. 이를 위해 농업생태학 기술을 사용하며, 식량의 재생처리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직판, 직매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일년내

## 해외리포트

내 행해질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의 자급자족이 이 프로그램의 최우선 사항이며, 생산된 농산물은 모두 농업생태학기술을 사용하여 재배된다.

또한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영양 및 환경과 관련된 문화 및 관련 직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집약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의 사용과 노동력 사용, 환경보호와 경작기술, 지속가능성과 같은 농업베이스를 위한 전통기술과 현대기술의 복합된 활용, 유기비료, 종자 및 가축의 번식, 병해충 퇴치를 위한 친환경적인 방법사용, 또한 사용 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을 통해 외부 인풋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장소(병원, 학교, 노인요양원 등)에 납품하고 남은 것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가격은 생산자가 결정한다고 한다.

또한, 쿠바의 도시농업의 특징으로 생물학적 다양성에 기초한 기술 적용이라 할 수 있다. 650종 이상의 식물 및 특정지역의 전형적인 풍토병과 농업생태학과 관련한 틈새시장 등을 연구하였다.



〈그림 7〉 종자보급체계

여러 종류의 채소와 생초(fresh herb) 56종을 발육시켰다. 각 유기농장 및 집약농장은 일년 동안 최소 10종을 연구하고 있다. AU-ASU의 국가그룹(national group)은 143개 농장으로 구성된 종자 자치 농장망을 관리하고 있다. 이 농장들은 파종에 필요한 재료들을 높은 수준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돕는다. 또한 이 농장망은 연구기관을 통해 새롭게 생산된 종자와 재배방법을 상향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입종자를 대체하기 위한 재정지원, 자치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전략, 장기적인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계획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쿠바는 상추 수입종자의 75%를 이미 대체하였으며, 무 수입종자의 50%를, 중국산 근대 종자의 80%를 대체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 4. 시사점

쿠바의 도시농업은 쿠바의 정치 및 경제적 특수상황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와 비교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곤란할 것이다. 우리는 유기농업을 통해 더 값비싼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유기비용을 외부로부터 들여와 사용하고 있으며, 수확된 농산물도 외부로 비싼 값에 팔고 있다. 즉, 유기농업 쿠바에서는 도시농업의 목적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깨끗한(단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 등 환경친화적 성장이 중요한 트렌드가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지역순환적 농업의 실험이 쿠바에서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정부분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즉,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여 자기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면,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지역의 신뢰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며, 유기농업을 통해 깨끗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부익부 빈익빈, 도시지역은 성장하고 농촌지역은 쇠퇴하는, 그리고 그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구조에서의 새로운 출구 전략으로서 도입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학습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

## - 평생학습의 미래와 가치의 변화를 위하여 -



김광식  
충청남도평생교육  
진흥원장

### Dialogue in the Dark, 혁신의 평생학습

‘암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웅성거리는 소리들. 지팡이에 전해오는 바닥의 촉감이 손으로 느껴져 전신으로 전해진다. 지금 나는 그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다. 거리에, 바다에, 극장에, 시장에, 불안과 긴장, 호기심. 곤두 선 감각이 내게 신호를 보낸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느닷없이 들이닥친 생경함이 두렵기까지 하다.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앞 사람의 흔적을 찾아, 발걸음을 옮길 뿐이다...’

Dialogue in the Dark(어둠 속의 대화)는 1988년 독일에서 시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5~6명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시작장애인의 가이드에 따라 암흑 속에서 70분 가까이 시각장애체험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거리를 걷게 하는 것이 전부인 이 간단한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지금은 전 세계 18개의 도시에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Dialogue in the Dark는 기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거리를 줄이며, 사회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혁신적 사고에 기반 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평생학습은 10년간 급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다양한 개인의 취미나 여가 활용, 노동 시장의 불안, 국가주도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 등이 맞물려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승일로에 있고, 그에 걸맞은 다양한 성과들도 집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참여분야가 문화예술교육이나 직업능력교육으로 집중 또는 한정되면서 단순한 개인적 학습에서 머무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생학습이 개인적 학습에서 사회적 참여 학습으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하게 역설해준다. 평생학습의 핵심은 성취와 변화이고,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며, 그 도구는 재미이다. 한글을 모르던 어르신들이 문해 교육을 통해 얻는 성취와 변화의 감동은 눈물겹다. 꼭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니 재미와 열정이 따를 수밖에 없고, 재미와 열정이 따르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 학습의 결과라면, 이제는 사회적 학습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학습이란 관계 속에서의 학습이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들, 지역사회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일들, 협동을 통해 사회적망을 확산시키는 일들, 공공적 제도와 법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집단적 지성의 일들, 나아가 희망을 주는 미래가치를 예측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일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일들을 통해 변화와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 사회적 학습의 역할일 것이다.

이제, 평생학습에서도 혁신적 사고를 통한 창조적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Dialogue in the Dark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자세의 변화와 함께 그들과의 관계망을 통해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가치의 변화를 유도해낸다는 점이다. 혁신과 창조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공교육의 가치를 경쟁이라는 획일화된 잣대로 재단하는 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사회적 학습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협동과 다양성이 숨 쉴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공공의 차원에서 준비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머리와 가슴을 온통 경쟁의 가치에 지배당한

많은 이들에게 갑자기 협동과 다양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승냥을 찾는 일과 뭐가 다르겠는가? 가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 우선시해야 될 때이다.

##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평생학습의 출발

학습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지역을 바꾼다. 평생학습에서 ‘참여’는 ‘스스로’라는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이 단지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개인만의 영역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야 할 타인과 이웃,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가 있다는 철학적 가치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평생학습은 상위단위에서 하위단위로 연계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결국 지나친 성과주의에 집착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갈등과 배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주는 아래로부터(bottom-up)의 운영 방식이 절실하다.

여기에서 가장 의미 있는 파트너십은 사회적 학습동아리에 대한 발굴, 육성, 지원이다. 사회적 학습동아리는 주민주도형 평생학습의 실천적 교두보로서 평생학습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학습동아리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느닷없이 들이닥친 생경함’을 ‘안도하며 앞 사람의 흔적을 찾는’ 평생학습의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춘 관광 개발해야 외국인관광객 2,000만 명 시대 맞으려면



권오덕

충남발전연구원 이사,  
前.대전일보주필

2012년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연말까지 1,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2011년의 세계 25위보다 한두 계단 앞설 것이 확실하다. 3~4년 전의 42위에 비한다면 엄청난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관광대국(2011년 통계)이라면 프랑스(8,141만 명), 미국(6,271만 명), 중국(5,758만 명)이다. 그 뒤를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이 차지하고 있다.

관광대국 중의 대국인 프랑스는 문화자산이 풍부하고 다양하다. 문화인프라도 어느 나라보다 잘 돼 있다. 그 중심에는 파리가 있지만 남프랑스의 볼거리도 많다. 교통도 편리하고 먹거리와 숙박시설도 훌륭하다. 모든 관광자원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거의 유럽 전체와 맞먹는 큰 땅덩어리와 함께 주(洲)마다 다른 문화의 다양성,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교통망으로 해마다 세계인을 끌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크기의 땅 넓이에 5000년 문화유적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전 세계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한국·일본 등 인접국을 대상으로 한 엽가공세가 먹히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는 훌륭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한 마디로 '조상 팔아먹고 사는 나라'라면 지나친 말일까. 그러나 우리보다 앞선 홍콩(13위)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얼른 수궁이 가지 않는다.

### 황당한 세계 관광명소 우리도 他山之石 삼아야

그들은 순전히 인공적으로 만든 관광명소가 세계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자연자원 세계 103위가 말해주듯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더구나 관광개발성이 106위, 손님 친절도는 125위로 하위권이다.

GDP서 차지하는 관광비중도 불과 5.6%로 프랑스의 20%에 많이 뒤진다.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우리다. 서양은 별 것 아닌 것도 이야기를 만들어 세계인들에 팔아먹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세계에는 썰렁 황당한 관광명소들이 즐비하다. 대표적인 몇 개를 들어보면 독일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과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 등은 실제로 가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관광객이 넘친다. 로렐라이는 라인강을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 나지막한 언덕이 전부다. 기념동상도 잘 안 보이고 배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하이네 시에 질허가 작곡함)가 전부다.

인어공주상도 보잘 것 없기는 마찬가지. 안텔센의 동화로 유명세를 탄 실물크기의 이 동상은 세워진지 100년 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의 촬영장소로 각광받아왔다. 엄청난 외화벌이를 해줬지만 페인트가 칠해지는 등 수난도 많이 겪었다. 오줌싸개 동상 역시 실제로 보면 황당하고 썰렁하다. 발가벗은 사내아이가 고추를 내놓고 힘차게 소변 보는 것뿐이다. 이상 예를 든 것은 전설이나 일화가 뒤받쳐주는 공통점이 있다.

## 서울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관광정책 전환해야

우리는 왜 못하는가. 비근한 예로 부여 낙화암은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다. 백제가 망할 때 낙화암에 떨어져 죽은 3천 궁녀는 얼마나 좋은 소재인가. 그런데 이를 알고 오는 외국관광객은 거의 없다. 알리지 않아서 그렇다. 반대로 널리 알

려진 사례인 보령의 머드축제는 해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다. 전남 영암의 F1코리아그랑프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뿌린 만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최근 크게 성장한 것은 ‘한국방문의 해’(2011-2012년)를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힘쓴 결과다. 또 K팝과 드라마 등 한류가 한국방문을 자극한 측면도 크다. 중국과 일본방문객의 급증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과 일본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춘 관광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내국인이 먼저 찾아 입맛에 맞아야 한다. 보령머드축제와 남이섬이 대표적인 예다.

또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경관위주에서 체험위주, 기타 의료관광과 MICE(국제회의·전시) 등 융합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DMZ를 관광 상품화해야 하고 일본 중국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나와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도 개발하면 좋겠다. 그리하여 현재 40%선인 재방문율을 일본과 비슷한 60%선까지 올린다면 2,000만 명 이상이 한국을 찾을 날은 머지않았다.



## 양극화, 그리고 거버넌스



김대길  
한국해비타트 천안/  
아산지회 사무국장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법적·정치적 평등권을 갖는다는 의미로써 지위고하를 떠나 위법에 대한 상응한 처벌과 함께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1인 1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권은 법과 정치의 범주에만 국한될 뿐, 그 밖의 영역에는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특히 경제영역이 그러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누구나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며 영리 추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증식할 수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계급과 차이가 파생되며, 무한경쟁 하의 특정 계층의 자본집중화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polarization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심각한 사회·경제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최근, 대선 정국을 맞은 한국사회는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각 후보 진영이 쏟아내는 다양한 정책비전과 어젠더들의 혼전 양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 간의 첨예한 이념 대립이 상존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전인 지난 1996년, 56%이던 중산층 비율은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에는 44%로 감소했고 빈곤층은 11%에서 20%, 고소득층은 20%에서 25%로 증가했다.

수치대로라면 친 서민 정부를 자처한 진보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의 삶은 궁핍해져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들어선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는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의 부부의 증가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경기진작

으로 이어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트리클 다운과 함께 선택과 집중, 불균형 성장 전략, 비교우위 이론 등은 격차를 줄이는 것에 무심하거나, 격차를 방임 또는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위기는 앞으로 장기화될 공산이 크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심화된 양극화를 지적한다. 국내 일자리의 99%를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양극화는 내수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내수산업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부실은 곧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내수 부진을 초래하며 성장 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기반이 잠식당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심화된 양극화는 경제에 심각한 폐단을 낳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재와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 부재로 인해 사회 불안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상호 통합을 이루는 해법은 무엇일까?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 일종의 반사회적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은 거대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국가권력의 자본 견제력도 약화되었다.

이런 실정에서 인간과 지구적 자본의 탐욕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강화와 성숙을 통한 거버넌스가 시대적 과제로 요청된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은 19세기 공리주의에서 비롯된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질적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가급적 다수의 뜻대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바로 이런 의미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다수라는 양적인 기준만을 앞세우는 것이 과연 최선일지 의문이다.

인과적 순서를 떠나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한 성찰적 합의체제의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대한 변화의 바람과 도전으로서 인간의 삶의 의미에 대한 재발견과 새로운 인간 욕구의 분출에 따른 저항으로 규정된다. 헤게모니와 기득권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구조화된 제도 하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틀 속에 억압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평등을 회복하는 일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정의의 실현이다. 이제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강화된 힘의 바탕 위에서 쓸모없는 힘겨루기로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

의사결정 방식을 제도화하여 정부와 기업, 시민 사회가 상생하고 견제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긴장된 균형 또는 생산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겠다.

이제 세계화의 물결은 경제 지상주의와 시장 중심의 관계를 뛰어넘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사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회 각 섹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협치의 관계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시민사회로부터의 정당성 부여가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중대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시민 사회 조직은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개혁이 요구된다.

경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돈과 재화의 흐름flow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계급구조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야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른다. 세상에는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며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가 있다. 지식의 높낮이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하구조의 양극화는 흐름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강한 자가 병약한 자를, 많이 배운 자가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자를 돕는 흐름의 미학은 그 어떤 제도적 방안보다도 양극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등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으로 여겨진다.

모두가 똑같아 아무런 나눔과 소통이 없는 사회란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라는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에도 흐름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상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서로의 공과功過를 면밀히 따져 견제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중용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이해관계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 치는 경향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중용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의 행복,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상호 간의 올바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수 있겠다.

## 내포 시대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 도 정책자문위 복지보건분과 토  
론회...주제발표 · 토론 등 진행

충남도는 12월 3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보건분과 위원과 전문가, 도와 시·군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포 시대’ 충남 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복지보건분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공범식 도 복지보건국장의 기조발제와 분과별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충남의 복지보건 정책’을 주제로 한 1분과 토론에서는 ▲이재완 공주대 교수가 ‘민선5기 충남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충남 복지거버넌스와 지역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류진석 충남대 교수는 ‘충남도 저소득 빈곤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나백주 건양대 교수는 ‘충남도 보건의료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



을 찾기 위한 2분과 토론회에서는 ▲모선희 공주대 교수가 ‘충남도 노인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석말숙 나사렛대 교수는 ‘충남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최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충남도 아동복지(보육·청소년)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충남도 여성,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권희태 도 정무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내포시대에 맞는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축 등 충남복지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협동조합 지원 전담부 서 가동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  
동조합 활성화 대책 추진

충남도는 12월 2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1일부터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과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 조기 정착과 도민들의 협동



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경제경제담당에서 협동조합 신고수리, 지도감독 등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하며, 도민 인식전환 교육·홍보 등 협동조합 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또한 충남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인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설립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 정책연구 및 우수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설립·운영 매뉴얼을 체계화해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경우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충남도 2013년도 예산안 4조 9,413억원

충남도는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11월 6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9,500억원으로 금년보다 800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367억원으로 78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청사 건립관련 특별회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도 3,546억원으로 금년보다 238억원 증가하였다

2013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민선 5기 하반기 중점과제인 복지, 문화, 경제 및 3농혁신분야의 정책수요와 내포 신도시 조성, 도청사 건립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서비스 기반확충, 의료급여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등 1조 1,9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선진문화관광 구현을 위해서는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서해안권 광역 관광지 개발, 지역문화축제 육성 등 1,451억원을 편성하였고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 경제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4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농 혁신을 통한 도민이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기반구축, 초·중학생 무상급식,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 6,654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청사 건립 마무리 및 내포신도시 기반구축비로 내포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충남 보훈회관 건립, 보건의료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도청사 건립 및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 479억원을 반영하였다

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수렴·반영코자 도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도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자체사업 예산편성관련 자문을 거쳤으며 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ARS 전화설문, 정책 서포터즈 우편설문 등을 통해 모아진 제안사업들은 실국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하였다.

##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 우뚝

- 도착금액 비율 1위 등 따라...  
2002,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충남도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1월 1일 외국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02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도의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교육·의료 부분 강화와 자체 투자유치 업무기준 마련 등 투자유치 기반 확대 및 토착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탁월성을 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주요 공적을 보면, 도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1건 5억6600만 달러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같은 기간 신고금액은 58건 7억3600만 달러, 도착금액은 9건 6억9900만 달러로,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율이 95%를 기록하며 전국 1위에 올랐다.

도는 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립 추진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간담회 6회) ▲외국기업 전담 병원(천안 단국대) 지정 등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교육·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4대 항목(경제효과, 환경성, 반외자 정서, 인센티브) 검토대응 ▲한·미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비 MOU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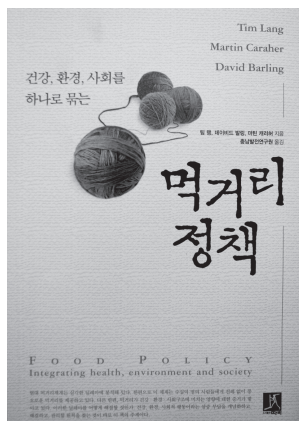


준안 마련 ▲고용창출·지역민 우선 고용·사회적 책임 명시 등 투자유치 업무기준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추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3개소 지정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및 문제점 처리(88건) 등 유치한 외국인 기업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도 중점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은 한번 충남을 찾은 외국인 투자자는 또다시 충남을 찾고, 충남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도내에 뿌리 내리고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유치 전략’이 빛을 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 기업 토착화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먹거리 정책' 번역서 출간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은 통합적 먹거리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번역서 '건강, 환경, 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 정책'을 출간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이 책은 전세계적으로 먹거리정책(Food Policy) 분야의 독보적인 석학이자 1990년대 초반 '푸드마일'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한 영국 런던 시립대학교 '팀 랭(Tim Lang)' 교수를 중심으로 2009년도에 집필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먹거리정책은 현재의 분절적인 먹거리정책이 아닌 통합적인 먹거리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요즘 잘못된 먹거리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산업화된 농업생산에 따른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면서 "농업과 먹거리를 협소한 산업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지구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건전하게 지탱하는 생명 유지의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생태적 건강'이란 개념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이해가 먹거리체계 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는 먹거리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글로벌 식량위기가 만성화된 지금,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칭)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 책이 농민의 소득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먹거리정책'을 논의하는 단초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충발연 허남혁 책임연구원(번역 책임)은 "먹거리 종합계획은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최근 런던, 뉴욕, 토론토 등 세계적 대도시들이 지역의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이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덧붙였다. <도서출판 따비, 518p, 25,000원>

## 충남발전연구원, '행복' '사회적경제' 등 2013년도 연구아젠다 발표

- 12월 11일, 전략과제 제안대회 갖고 주요 연구과제 심의·토론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이 올해 전략과제 아젠다를 발표했다.

충발연은 지난 12월 11일 대전레전드호텔에서 올해 주요 핵심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2013년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제안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충남발연이 뽑은 2013년도 연구 아젠다는 ▲충남도민의 행복도 제고 ▲선순환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 ▲충남 3대혁신(3농, 분권, 행정) 실천 전략 수립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충남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 ▲충남 현안 정책 대응 등 총 6개 분야다.

특히 충남발연 박진도 원장은 “내년도 전략과제는 올해 수행했던 ‘행복’ ‘선순환’ ‘3농혁신’ 등 연구의 지속성이 필요한 과제의 실천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육성, 충남 자살실태와 예방 연구, FTA·기후변화 등 충남의 중장기적 대응 연구들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안대회에는 충남도 권희태 정무부지사,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원내·외에서 제안된 60개 과제 중 1차로 선정된 28개를 발표·심의했다.

한편, 충남발연의 2013년도 전략과제는 이번 제안대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최종 선정해 1월부터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충남농어촌응원운동 “사랑촌(村) 행복파티” 개최

–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마을에서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운동’ 전개



충남농어촌응원운동 확보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파워블로거와 충남농촌체험마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은 충남농어촌응원운동본부,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랑촌(村) 행복파티”를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에서 11월 10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체험활동에 관심있는 도시파워블로거 30가족(약 120명)과 충남농촌체험마을 관계자 등 총 180여명이 참가해 도농가족간의 교류·소통의 장이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아침밥상차리기 경연, 비빔밥 컨테스트, 고구마 캐기 등 체험활동, 지역농수산물 가공품 직매장 운영, 우리마을 자랑시



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졌으며, 마지막 순서로 '도농가족 결연식'을 갖고 충남농어촌 응원군을 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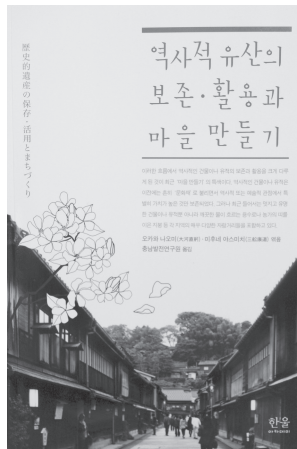
특히,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침밥상차리기 경연은 지역농수산물을 활용한 333아침밥상차리기 경연(3가지, 3색, 30분 조리)으로서 요즘 아침식사를 거르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메인 행사다.

또한, 경연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는 모두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며 경연을 통해 충남도만의 '군침도는 아침밥상', '맛깔난 건강밥상' 등을 선정, '최고의 밥상'을 뽑기도 했다.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유학열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선정된 충청남도의 아침밥상은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며, 도시민과 충남체험마을의 결연을 통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도농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과 마을 만들기」 번역서 발간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이 역사적 유산을 이용한 일본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다룬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과 마을 만들기」를 번역, 발간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 책은 역사적인 건물과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모범적인 마을 만들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근대 역사적 유산의 활용이 활발히 이

뤄지는 미국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개별 역사적 유산, 근대산업 유산, 마차야, 가야부키 등을 중심으로 한 실제 활용·재생 사례와 여기에 참여한 현장 사람들의 경험담도 담겨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우리는 마을의 역사적 유산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다가 막상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책을 통해 국내에서도 역사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카와 나옴이·야스미치 엮음, 충남발전연구원 옮김, 368쪽, 3만4000원, 한울〉

## 충남발전연구원, '전통 시장 어린이 경제캠프' 실시

— 지역아동센터 학생 대상으로 현명한 소비활동 등 체험학습프로그램 제공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경제교육센터는 11월 3일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에서 지역아동센터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배우는 경제이야기”라는 주제로 어린이 경제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경제캠프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전통시장에서 배우는 경제교육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캠프가 열리는 온양온천시장은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전통시장 운영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다.

충남경제교육센터 임형빈 센터장은 “이번 어린이 경제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통시장에서의 현명한 소비생활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경제캠프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전략 연구과제 보고대회’ 24일 개최

—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연구성과 발표.토론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은 10월 24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2012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올해 충발연이 중점 수행하고 있는 전략연구과제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충남도정이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전략’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충발연은 총28개 전략연구과제 중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고승희),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실태 및 과제’ (신동호), ‘충남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 (강마야),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활성화 방안’ (송두범),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과 적용방안 연구’ (박철희) 등 총5개 연구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한편, 연구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한남대 민완기 교수의 좌장으로 충남도의회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 충남대 안기돈 교수, 중앙대 배용규 교수, 통계개발원 이희길 사무관, 충북대 김학실 연구교수, 충남도 박범인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각 연구과제의 향후 발전방향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충남도의회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은 “충발연의 전략과제 연구성과가 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남도, 도의회 등과 지속적 논의를 거쳐 향후 도정을 이끄는 주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선도적 연구개발과 정책제안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이 전략연구과제가 충남도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학계,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언론계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http://www.cdi.re.kr)

| 원고작성 | A4용지 4~5매, 휴먼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 840-1123 팩스 (041) 840-1129 E-mail : [cdipr@cdi.re.kr](mailto:cdipr@cdi.re.kr)